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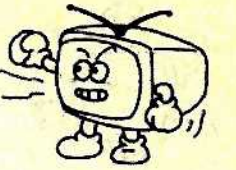
보), '서해교전, 북 함정 1척 격침', '밀어내기 충돌 중, 북 기관포 팽'(한겨레) '5분만에 격퇴, 전군 비상령', '계획된 도발?'(KBS) 대부분의 기사가 이러한 제목들과 함께 거대한 함포사진, 교전일지 및 그림 설명 등과 함께 '서해안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식으로 시작되고 있다. '전운이 감도는 서해연안에는 귀신잡는 해병이 몰샐틈 없는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녘을 향한 총구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공군도 초 긴장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서부전선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속에...'(KBS 메인 뉴스) '그동안 적과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까맣게 잊고 살아온 것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장병들은 북측을 응시하며 경계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피해에 대한 보복으로 새로운 도발을 해올 가능성...', '북한이 총격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충돌 공격 감행...'(이상 SBS)등은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을 증계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실지로 서해안 사건이 터졌을 때 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은 거의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과연 우리 언론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래도 되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언론보도에는 그동안 열흘 가까이 서해안에서 남북, 양측의 긴장 상태가 조성되었고, 그 긴장 상태가 '교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다리더라도 한



듯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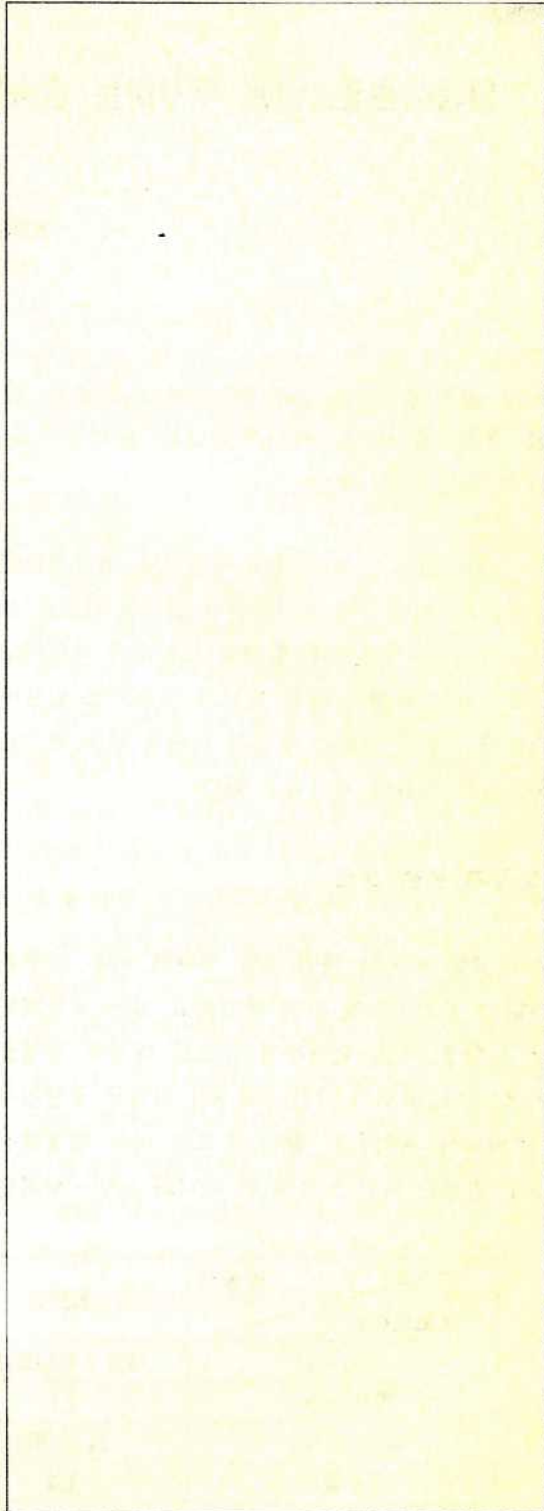
#### 4. '사건'으로 '정책 기초' 퇴색시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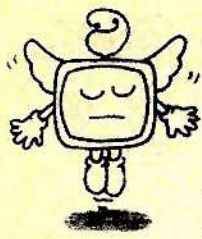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한 하나의 정책기조이다. 그런데 6.25의 비극까지 겪은 남과 북 사이의 화해와 통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므로 '햇볕정책'이라는 정책기조로 나감에 있어 수많은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개방의 시대라고 해도 과거의 악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므로, 크고 작은 걸림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서해교전 사태도 그 걸림돌의 표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은 '서해교전'이라는 큰 틀을 제고하자'는 단세포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조선일보가 가장 심하고,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이에 편승하고 있다. 한국일보와 한겨레신문의 경우 큰 틀에서 햇볕정책이라는 정책기조와 '사건'의 격이 다름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사건이 터진 뒤 사실(6월 16일)을 통해, "이번 북한의 소행은 한마디로 김정일 정권이 남쪽 현정권의 '햇볕' 안으로 절대로 들어와주지 않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천명해 보인 것"이라며 "국민의 정부는 대북 인식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6월 17일자 사실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 사태를) 냉전일변도로 몰아가서는 안 되고 북한이 평화적으로 개혁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록 계속 유도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한반도 냉전이 격화되고 심화된 것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때문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는 식의 냉전적 논리를 내세우며 "국민의 정부의 균형된 역사인식이 아쉽다"고 꼬집고 있다. 동아일보도 6월 16일자 사실 <햇볕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통해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답은 우리 관할 구역을 침범하고 먼저 우리를 향해 포를 쏘아대는 도발행위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햇볕으로 북한을 감싸지만 할 것인가"라며 햇볕정책 제고를 촉구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다음날 또 사실 <남북교전으로 끝난 게 아니다>를 통해 "상황이 정리되고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 교류 스케줄을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겨레는 6월 16일자 사실 <햇볕정책 흔들림 없어야>를 통해 "햇볕정책이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구조적으로 해체해 ...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여는 현실적 방법"이라며 대북 포용정책의 흔들림 없는 지속을 요구했다. 한국일보 역시 같은 날 사실 <포용기조는 지속돼야>를 통해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신 북풍론'이나 햇볕정책의 용도폐기론은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며 "북의 무력도발은 강력 응징하되, 대북포용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 남북한을 화해와 대화의 당사자로 보기 보다는 적대적인 관계로 보려는 기본 시각이 여과없이 드러나기도 했고 '남한 울리기, 북한 깎아내리기 식 경쟁보도'의 구태도 답보되었다. 그러나 이번 서해안 사태보도에서 긍정적인 언론보도 변화현상도 있었다. 과거와는 달리 신문사간 차별성 있는 보도가 가능했고, 방송사들도 천편일률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시대의 변화가 언론계 일부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발견할 수 있었다.





### 민중생존권, 인권 무시하는 방송뉴스, 축소 보도, 편파시비로 얼룩져

1999. 6. 1 ~ 6. 23  
KBS 뉴스 9, MBC 9시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노동계 움직임 축소, 서해교전 과다 보도로 보도량 균형 못 이뤄, 자사프로그램 홍보뉴스도, 철거민 보도는 편파

최근 방송뉴스가 노동계의 파업이나 민중생존권 관계된 사안을 철저히 무시하거나 편파적 태도를 보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노동계의 파업이나 지도부의 단식투쟁에 대한 보도가 축소되고 있으며 철거민과 관련한 보도는 일방적 비난과 편파 보도로 얼룩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1. 노동계 관련 보도

지난 4월 지하철 파업, 5월 총파업 이후 정부의 원칙없는 구조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는 최근 시한부 파업, 단식투쟁 등으로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옷로비 사건, 6월 8일 진형구 공안검사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등으로 더욱 강경해진 대정부 입장은 비단 노동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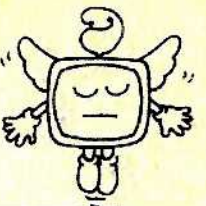
체도 동조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방송 3사의 뉴스를 보면 파업과 단식 등 노동계의 움직임에 대한 보도가 지나치게 축소 보도되고 있다. <표-1>에서 드러난대로 방송 3사의 메인 뉴스 노동계 관련 보도량은 전체 보도량의 1~2%를 밀도는 등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BS는 24일 동안 노동계 관련 보도량이 4꼭지에 불과했고 전체 보도량에 비해 0.7%에 그쳤다. 또 민주노총 1,300개 노조대표의 단식농성과 관련해서는 KBS에서만 20초밖에 보도되지 않았다. MBC, SBS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보도량은 지나치게 많아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배분을 보이지 않았다. 16일의 경우 KBS, MBC, SBS 각각 23, 19, 18쪽

방송사	KBS	MBC	SBS
보도량(초)			
보도시간	689 / 62,100초	927 / 66,999초	381 / 53,199초
백분율(%)	1.1	1.3	0.7
보도꼭지수	11 / 762	13 / 784	4 / 597
백분율(%)	1.4	1.7	0.7

<표-1> 방송 3사의 노동계 관련 보도시간



방송사	KBS	MBC	SBS
보도량(건수)			
6월 16일	23 / 39	19 / 37	18 / 27
백분율	59%	51%	67%
6월 17일	14 / 34	14 / 38	12 / 27
백분율	41%	37%	44%

<표-2> 방송 3사의 서해교전 관련 보도량

지나 보도했다(<표-2>참조). 이는 같은 날 전체 보도량의 59%, 51%, 67%나 되는 수치다. 물론 서해교전 사태는 국가안보에 관계된 문제인 만큼 뉴스 가치가 큰 것이었다. 그러나 이 보도로 다른 주요 현안들이 묻히게 된다면 뉴스량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서해교전 보도가 국내 현안을 은폐하는데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사는 이러한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 2. 자사 드라마 내용, 뉴스에서 보도되어야 하는가?

이런 와중에 각 방송사는 자사 프로그램 홍보성 보도도 서슴지 않았다. KBS는 6월 6일 <최수종, 배사라 첫 극중결혼식>이라는 보도를 통해 자사 드라마의 내용을 간접 홍보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극중 결혼에서 성공하기는 이번에 처음이어서 관련 업계에서는 상품화 가치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라는 리포트 내용은 극중 결혼과 상품화 가치, 관련업계의 시각 등의 관계가 선명하게 이해하기 어려워 억지로 기사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SBS 역시 6월 9일 <토마토 신드롬>이라는 제목 하에 "인기드라마 토마토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패션이 거리의 표정을 바꾸고 있습니다"로 시작되는 보도 역시 자사 드라마를 간접 홍보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웠다.

차라리 유행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적 자세로

접근했다면 하나의 뉴스아이템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행현상의 단순나열은 뉴스로서 보도할 가치가 전혀 없었다는 비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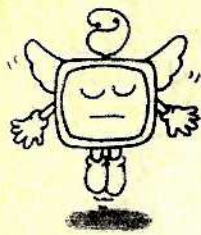
#### 3. 편파시비 불러온 철거민 관련 보도

한편 좀처럼 뉴스에서 보기 어려운 철거민 관련 보도가 있어 주목받았다. 수원시 철거민대 농성장에서 발견된 화포와 사제총과 관련한 이 보도는 철거민들이 살상용 무기를 만들어 경찰과 인부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MBC만이 지난 5월 24일 "철거민들은 자구책으로 만든 새총을 경찰이 과장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며 경찰의 구속에 대한 철거민들의 입장을 보도한 바 있다.

반면 6월 14일, 18, 19일 <또 사제총>, <사제총에 연산까지...>, <철거민 배후세력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KBS는 보도내용도 "계속 불법무기를 만들어서..."(6/14)라든가 폭발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경찰관 인터뷰(6/18)를 그대로 내보내는 등 철거민들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논조를 보였다.

SBS 역시 마찬가지였다. 6월 19일 <사제총포 배후있다>는 제목으로 "어제 경기도 수원시내 철거민 농성현장에서 수거된 엄청난 규모의 살상무기들을 보셨을 겁니다. ... 이 무기들은 제작한 것이 아니라 외부 불순세력들이 만들어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물론 철거민들의 행위 자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철거민들만을 비난하



는 것은 편파적인 태도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철거민들은 주거권이 침해된 것은 물론 방화, 성폭행 등 수많은 피해를 입어왔다. 철거 깡패들에 의한 폭력사태가 그다지 큰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만큼 철거현장의 폭력사태는 비밀비재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 방송 뉴스는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민들이 자구책으로 만든 '무기'에 대해 '살상용'이라느니 불순세력이 배후로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가 잘 드러난 사례라 하겠다. 이런 식의 보도는 일방적 비난 여론몰이가 아니냐는 비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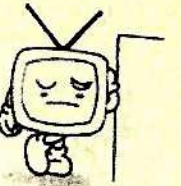
#### 4. 서울대 프락치 사건 보도 - KBS만 보도

지난 6월 22일 오전 11시 서울대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인권실천시민연대(준)와 서울대 총학생회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5월부터 국가정보원 직원 이양수씨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으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서울대 체육교육과 4학년 강성석씨의 사건을 폭로한 것이다. 그러나 KBS가 6월 22일 <'정보원 포섭'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강성석씨의 전화녹음 내용 등을 보도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방송사의 9시뉴스에서는 보도되지 않았다.

과거 독재 정권하에서나 일어나는 일로 치부되었던 '프락치사건'이 국민의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어떤 사안보다 뉴스가치가 뒤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인권에 무관심한 방송뉴스가 다수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을지 두고볼 일이다. 지금이라도 방송은 이 사건을 진상을 취재,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인권신장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논평부족, 사회감시 기능에 못미치고 있다

1999. 8. 1 ~ 9. 30

KBS 뉴스 9, MBC 9시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최근 방송뉴스가 연성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뉴스가 방송의 사회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 장르라고 할 때 뉴스의 연성화 경향은 사회감시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언론이 사회감시 기능을 발휘해야 할 재벌개혁, 정치개혁 등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나 비리보다는 사건, 사고, 민원 등에 대한 지역적 감시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8, 9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사안들이 방송뉴스에서 다루어진 것을 보면 이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연성화 경향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 연성 소재를 다루는 것과 소재가 무엇이든 흥미성으로 가볍게 다루는 것, 소재에 있어서는 건강·의학 뉴스와 동물관련 뉴스가 대표적인 연성 소재로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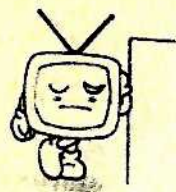
일례로 지난 8월 30일 방송 3사가 일제히 보도한 이혼과 사망관련 보도는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논문을 토대로 한 내용이었으나 <이혼하면 일찍 사망>(KBS), <이혼하면 빨리죽어>(MBC), <이혼하면 수명준다>(SBS) 등 지나치게 단정적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보도내용 전반은 '사회성'보다는 '흥미위주'로 흘렀다.

이 보도와 관련 KBS의 시각은 더욱 비판받았다. "장수하려면 처음 배우자와 오래 살아야",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 생활이야말로..." 등의 내용은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억압적인 우리나라 가족구조를 무시한 해석이며 가

부장적 사고방식을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보도는 이혼가정에 대한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을 극복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논문의 제언사항인 '사회적 지원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더 중요하게 보도되었어야 한다. 또 논문이라는 것이 확률통계를 토대로 한 하나의 연구결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흥미있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 하겠다.

비아그라와 관련한 보도도 빼놓을 수 없다. 8월 31일 방송3사는 일제히 보도한 비아그라를 먹고 사망했다는 외국의 사례를 보도하였고, 9월 3일 SBS는 [테마기획-나도한마디]편에서 <"비아그라 걱정돼요">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특히 KBS는 <한방 비아그라?>(8/12), <막바지 판매논란>(8/23), <10월부터 판매허용>(8/29), <부작용 2명 사망>(8/31), <심장병에 치명타>(9/1), <밀매극성>(9/2), <비아그라 대리전>(9/30) 등 8, 9월동안 총 7번에 걸쳐 비아그라 관련 보도를 했다. 이는 MBC, SBS의 2, 3건에 비하면 매우 잦다.

이 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그 위험성을 알고 신중한 복용을 권유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자칫 약품의 특성을 이용한 흥미성 뉴스로 전락할 우려도 없지 않았다. 방송, 특히 KBS가 이 약에 대한 과다 보도로 오히려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비아그라 붐'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다.



### KBS뉴스는 동물의 왕국(?)

한때 'MBC뉴스에 등장하지 않는 동물이 없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었다. 물론 과장된 얘기일수도 있겠지만 동물뉴스가 나오면 시청률이 올라간다는 점, 시청률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뉴스조차 시청률 때문에 아이템이 선정된다는 우리 방송의 현실을 잘 말해준 것이다. 최근 이러한 경향은 KBS에서 두드러졌다. KBS는 지난 8, 9월 동물관련 뉴스를 무려 25건이나 보도했다. MBC와 SBS는 각각 5건, 17건으로 보도했다.

사실 동물뉴스가 뉴스아이템으로서 무조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무리다. 일례로 8월 30일 보도된 <애완동물 밀수>(KBS), <애완용 원숭이 밀수>(MBC), <마취시켜 밀수>(SBS)의 경우는 '밀수'의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써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수달 3마리 그물에 숨긴 채 발견>(KBS 9/25), <수달친구 강아지>(KBS 9/15), <'뚝뚝한 쥐' 탄생>(9/2 KBS, SBS), <오징어도 양식>(9/1 KBS), <동해에 열대어>(9/2 KBS), <주택가에 뱀소동>(8/30 SBS), <왕도마뱀 탈출소동>(SBS 9/12), <도심 도마뱀소동>(KBS 9/12) 등의 보도내용은 수많은 사회적 이슈를 보도하기도 모자란 제한된 뉴스 시간에 굳이 보도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 단발성 사건·사고 기사 과다, SBS 두드러져

연성화의 또 다른 흐름으로 사건 사고 기사가 너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건 사고 기사가 모두 연성 소재는 아니지만 단발성 사건들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다루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문제점으로 비판받았다. 이러한 경향은 SBS에서 두드러졌다.

SBS는 하루 평균 2~3건의 사건사고 기사가 다루어졌다. 전체 약 24쪽지의 보도중에서 7~12번째 쪽지로 다루어지는 등 뉴스의 한 가운데 시간에 연이어 보도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기중기 전복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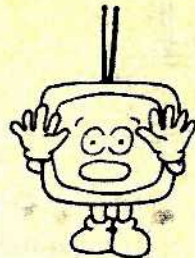
명 사망>(8/30) 보도와 같이 안전점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보도도 있었지만 대부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고경위를 자세한 현장중계식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9월 1일 뉴스가 대표적이다. 이날 SBS는 7번째 쪽지부터 12번째 쪽지까지 사건·사고 기사를 실었다. 이중 타방송사에는 없는 내용인 <공장불 10억 피해>의 경우 단순 스케치 보도였음에도 1분 10초나 보도했다.

이처럼 시청자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내용까지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사건 자체를 흥미성, 선정성 소재로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실성과 선정성의 차이를 오가는 시사보도 장르의 고질적인 병폐이기도 하다.

한편 사건 보도를 하는 경우 피의자에 대한 인권이 무시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8월 30일 KBS의 <보험노려 아들살해> 보도를 보면 피의자에게 옥박지르는 장면이 소리와 함께 생생히 방영되었고 피의자 옆에서 기자의 리포트가 이어지는 모습 역시 눈에 거슬리는 장면이었다. 그 어떤 중죄를 저지른 죄인이더라도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해 무시하는 듯한 자세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사고사건 보도에 있어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이 너무 무시되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한 때다.

### 방송뉴스, 시청률 경쟁에서 자유로워야

이상의 연성화 경향은 방송사의 시청률 지상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시청률에 집착하는 방송사의 태도가 방송뉴스에까지 미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오락적 기능은 확대·강화되고 사회감시 기능은 축소되는 방송 현실에서 방송뉴스마저 시청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언론의 사회감시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방송뉴스 만큼은 시청률에서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 국정감사 관련 신문·방송 보도 모니터

## '국정감사 보도' 실종, '국정감사장 보도'에 그쳐

1999. 9. 29 ~ 10. 29

KBS 뉴스 9, MBC 9시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 I. 들어가며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는 지금 시점이 김대중 정부의 집권 중반이자 내년 총선을 앞둔 시기라는 점 때문에 더욱 주목받았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기간에는 3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의정감시단을 조직화하여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국정감사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행정 전반을 감사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실질적 감시활동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러한 시민감시단 외에 국정감사를 주목하는 또 하나의 집단은 바로 언론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 국정감사현장을 접하고 있어 언론보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언론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의 경우 언론과 시민들의 '감시'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보다 더 선명한 모니터가 가능했다는 평가다.

### II. 신문

이번 국정감사 신문보도는 여·야의 대립과 선정적 보도로 정작 감사내용에 대한 보도가 소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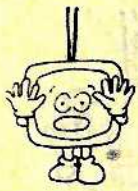


또 38개 시민단체가 구성된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이하 국감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한겨레만이 국감연대의 모니터보고서를 실는 등 차별성을 보였다.

### 1. 조선일보 - 선정보도의 극치, '예비 총선보도'로 전략

조선일보는 여야의 공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다루는데다 총선을 의식한 기사가 많아 '예비총선보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감사 첫날인 9월 29일자에서부터 조선은 <"정책감사" "실정폭로" 난타전 될 듯-15대 마지막 국감... 여야전략>(4면)라는 선정적 제목으로 여야의 싸움과 국감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보여주었다. 또 "이번 국감에서 돌보이면 16대 예약"이라며 여·야 정당별, 각 상임위별 전략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사는 국정감사 중반이 지나도 여전했다. 10월 4일자와 11일자에서 각각 <국감장인가...유세



장인가>, <“지역구 쟁전” 편찬에 “사회나 잘봐라” 금감위-국세청엔 공격 않고 급신급신>등의 기사 역시 마치 이번 국감이 여·야 정치인들의 총선 대리전인 듯한 의미를 주기도 했다. 특히 4일자 <국감장인가...>에서는 이번 국정감사가 “여의도만 시끄럽고 일반 국민들 관심은 냉담한 것 같다”며 일부 국회의원들의 문제성 발언과 실수만을 모아서 실수투성이 감사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는 고질적인 ‘정치불신 조장’ 보도로 비판받았다.

위의 기사처럼 아예 직접적으로 불신을 조장하는 기사도 있었지만 여야의 공방을 지나치게 확대한 기사 역시 불신을 조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10월 6일자 <홍석현씨 공방 “탈세는 국가사범”...“교묘한 언론탄압”>이라는 제목으로 조순은 보광그룹 수사와 관련된 여·야의 “치열한 장외 공방전”을 다뤘다. 이날 조선일보는 국민회의의 입장과 한나라당의 입장을 각각 다루면서 대칭으로 편집했다. 또 10월 9일자 5면 <‘이총-홍총’ 밀약설 여 제기에 야 발끈 국회일정 논의 파탄>이라는 기사 역시 이전투구식 공방기사였다. 이처럼 국정감사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조선일보의 기사는 국회의원에 초점을 맞춰 국정감사를 비판하는 데만 앞장섰을 뿐 국정감사 보도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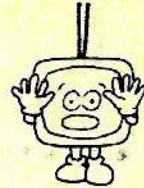
## 2. 동아일보, 한국일보 - 중계보도 틀 벗지 못해, 동아는 자사홍보성 보도 ‘염치없다’는 비판

동아일보는 9월 28일 <걸치레 국감 안된다>라는 사설에서 “치밀한 준비속에, 부질없는 정치공방을 삼가고 정책을 따지며, 대안(代案)을 제시하는 실속 있는 감사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설은 그동안 국정감사에 대해 지적되었던 ‘정치공방’, ‘중복질의’, ‘한건주의 폭로’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국정감사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차분하게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반 기사를 보면 동아일보 스스로 ‘총선을 앞

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여·야 공방보도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10월 8일 <국감 맞사대질>이란 사진을 실었고 10월 4일자 <국감장인가 유세장인가?>라는 기사에서는 총선을 앞둔 한 건 주의를 비판했다. 이 기사는 발언 실수 등 지역적 문제를 부각, 국정감사 전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자사홍보성 기사도 눈에 띄었다. 10월 5일자 <문광위 국감 속기록-언론탄압 논란>기사가 바로 그것이다. 이 기사는 이훈평 의원 등 몇몇 여당위원의 발언중에 나오는 “과거 박정희(朴正熙)정권의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태 때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편집을 방해하고 광고주를 협박했지만 동아일보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전세계와 국민으로부터 지원 받아 언론자유의 금자탑을 세웠다”는 식의 발언을 여러 차례 실었다. 74년 있었던 ‘동아일보 광고탄압’에 대한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은연 중에 자사를 미화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동아일보가 이와 같은 보도를 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당시 해직된 기자들은 복직은 커녕 명예회복도 되지 못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 한번도 사과한 바 없는 동아일보가 당시 의식있는 기자들의 투쟁이 동아일보의 공인양 기사화하는 것은 염치없는 보도였다. 이 밖에도 동아일보는 홍미성 보도가 많았다. 또 여·야 의원이 낸 자료중심으로 보도했으나 이것이 ‘정책평가’로 한 발 나아가지 못하고 ‘중계보도’에 그쳤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일보 역시 여·야대립을 중계방송처럼 보도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화관광위 관련 보도 대부분이 ‘보광사태’에 대한 여야대립 기사였다. 또 정치면에 거의 매일 실리는 <말말말...>은 자칫 ‘정치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이 기사는 “국세청 자진 신고는 라면박스가 받나...”(10월 7일자) 등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몇몇 의원들의 자극적인 언어를 기사화 함으로써 국정감사를 흥미 위주로



호르게 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정감사를 차분하게 잘 다룬 기사도 있었다. 10월 8일자 4면에 보도된 <국감초점-골드뱅크, ‘의혹뱅크’로>라는 기사는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있었던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올해 상반기만 14억원의 적자를 낸 이 업체의 주가가 40여배 가까이 폭등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이 있었는지...등 「의혹의 배후」를 파고들었다”라며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차분하게 평가했다.

## 3. 객관성 상실한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이번 국감보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신문이었다. 중앙일보는 이미 보광그룹 탈세수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국정감사 보도에서도 감사 내용보도는 소홀한 채 여전히 홍석현 사장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지나치게 부각, 자사 이해관계에 매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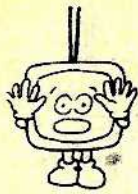
일례로 10월 7일자에서는 1면 머리기사와 4면 기사에서 각각 <“홍사장 중앙일보 인수자금 출처 밝혀 보광 세무조사”>, <안청장 표적조사 실패...직원들 “큰일났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모두 안정남 국세청장의 발언을 크게 인용한 것으로서 마치 ‘보광사태’가 표적수사와 언론탄압인 듯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기사를 보면 안 국세청장은 “홍석현 사장이 보광 이외에는 다른 사업을 한 적이 없고, 보광 또한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를 인수했던 자금의 출처가 정당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실시됐다”고 말했다. 이 발언의 내용은 중앙일보의 주장처럼 언론탄압을 위해 한 기업을 의도적으로 세무사찰 했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오히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홍사장이 거대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무조사를 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따라서 중앙일보의 제목은 이

런 점을 의면하고 자사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제목을 달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같은 날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중앙일보의 잘못된 보도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동아는 안정남 국세청장의 발언을 인용, “보광탈세 독자판단...”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했다. 이후에도 중앙일보는 국정감사 관련 기사에서 유독 홍석현 사장과 관련된 내용을 확대하여 기사화하였다.

## 4. 한겨레신문 - 시민단체 평가 적극적으로 활용, 감사내용에 대한 보도 가장 충실

위의 네 신문과 달리 한겨레신문은 국정감사 ‘내용’을 적극적으로 보도한 편이었다. 또 [한겨레와 함께 하는 시민모니터]라는 기사를 통해 국감연대의 모니터 보고서를 기사화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봅시다>라는 기획기사를 통해 하루에 한 명씩 의원들의 정책을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국정감사가 진정한 정책감사의 장으로 발전하도록 하는데 일조했다는 긍정평가다. 감사기간에 총 세 번의 사설을 실음으로써 다른 신문에 비해 관심 있는 자세를 보인 것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9월 29일 <국정감사는 정책중심으로>, 10월 2일 <재벌총수의 국감 불출석>, 10월 4일 <‘시민국감’ 막을 명분 없다> 등 국정감사의 주요 사안에 대해 적절하게 논평했다는 평가다. 특히 9월 29일자 사설에서는 “국감장을 정치 공방 무대로 착각하는 풍토를 고쳐야 한다... 주목할 점은 여러 시민단체들이 의원들의 개별 의원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그 취지에 찬성한다”라며 이번 국정감사에 거는 기대를 밝혔다. 이러한 기대만큼 한겨레신문은 일반기사에서도 정책중심의 보도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는 평가다.



	KBS	MBC	SBS
보도 건수	36 / 717	53 / 797	34 / 519
보도 비율	5.0	6.6	6.6

<표-1> 방송 3사 메인뉴스의 국정 감사 보도량  
(보도비율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계산한 것으로서 MBC와 SBS는 각각 6.64% 6.55%이다.)

## II. 방송

이번 국정감사 관련 방송뉴스는 일부 심층·기획 기사와 감사내용 중심의 제목달기 등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정책보도'를 하려는 노력은 엿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공방을 중계보도한 경우가 여전히 많았다. 이는 국정감사를 너무 가볍게 다룬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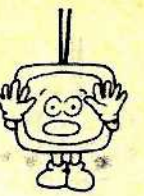
### 1. 보도량 점검

방송 3사의 메인뉴스를 분석한 결과 MBC 53건, KBS 36건, SBS 3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보도량 대비 각각 6.6%, 5.0%, 6.6%로서 KBS가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KBS가 공영방송임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보도량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체 보도량보다는 각 상임위에 대한 양적 불균형 보도에 있다. 즉 많은 건수가 보도된 상임위가 있는 반면 전혀 보도되지 않은 상임위도 있었다. 더 나아가 많은 건수가 보도된 경우 불필요한 보도가 많은 반면 주요한 사안이 다루어졌

	KBS	MBC	SBS
1	문화관광 (7건)	보건복지 (7건)	정무 (5건)
2	재정경제 (5건)	과학기술정보통신 (6건)	국방 (4건)
3	정 무 (5건)	재정경제 (6건)	문화관광 (4건)
	건설교통 (5건)		

<표-2> 국정감사 관련 보도건수 3위내 상임위에  
에도 전혀 보도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국민의 알



KBS	MBC	SBS
통일의교통상	산업자원	통일의교통상
행정자치	과학기술정보통신(6건)	국방(4건)
교육	재정경제(6건)	문화관광(4건)
산업자원		

<표-3> 국정감사 보도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상임위

### 2. 보도 방식 및 성격 -사실 나열적 보도, 흥미 성 스케치 기사 대부분

각 방송사의 국정감사 보도방식을 분석한 결과 <표-2>에서 드러난대로 방송 3사 모두 스트레이트 기사와 스케치 기사가 가장 많았다. 이들 기사 대부분이 '국정감사에 대한 보도'라기 보다는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사건'을 스케치 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몇몇 기사에서 국정감사 의제를 중심으로 심층·기획보도 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이와같은 기사는 MBC와 SBS가 각각 12건, 9건이었고 KBS가 4건으로 가장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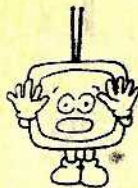
또 스트레이트 기사가 많아서인지 보도성격을 분석한 결과 사실적 보도가 많았고 스케치 기사 대부분은 흥미성 기사인 것으로 드러났다.<표-3>참조) 반면 분석적 기사나 고발적 기사는 방송3사 모두 적은 양을 보였다.

	KBS	MBC	SBS	총계
스트레이트	21(58.3)	19(35.8)	12(35.3)	52(42.3)
스케치	3(8.3)	10(18.9)	10(29.4)	23(18.7)
스트레이트성 논평	8(22.2)	9(17.0)	3(8.8)	20(16.3)
심층보도	2(5.6)	4(7.5)	6(17.7)	12(9.7)
기획보도	2(5.6)	8(15.1)	3(8.8)	13(10.6)
인터뷰	0	3(5.7)	0	3(2.4)
기타	0	0	0	0
총계	36	53	34	123(100%)

<표-4> 방송 3사 메인뉴스의 국정감사 보도방식 (단위:건수(%), 음영은 빈도수 3위내)

이번 국정감사관련 보도태도를 분석한 결과 MBC와 SBS는 긍정적 태도가 KBS는 가치중립적 태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MBC는 국정감사 사안을 조명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정감사 자체에 비교적 긍정적 시선을 보여주었다. KBS의 결과는 실제로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 비판한 것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언론의 정치보도가 '정치인 비아냥 보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비판일색이었던 것을 볼 때 KBS의 국정 감사 보도는 이러한 틀을 크게 벗지 못했다는 혐의가 짙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진행된 것이어서 의원들의 준비상태가 불량하지 않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



방송사	월/일	제목 및 기사
KBS	10/5	<태운 돈 연 5억원> “회대의 도둑 김강용에게 당한 일부 인사들은 김치 냉장고와 꽃병에까지 돈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자레인지와 오븐 등이 새로운 은닉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9/30	<“비아그라” 대리전> “의사출신 의원들과 약사 출신 의원들이 대리전의 전사였습니다.”
SBS	9/29	<국감장서 감정싸움> “이름이 거론된 야당의원들은 잔뜩 버리고 있었던 듯 엄 이사장의 학력 문제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 엄 이사장은 야당의원들이 자신을 흠집 내는데만 열중하고 있다면서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표-5> 방송 3사 메인뉴스의 국정감사 관련 대표적 흥미보도사례

다. 실제로 <정책자료집 붓물 부실감사속 빛났다> 평가를 받았다.  
(한겨레 10월 21일자), “초·재선의원들 활약 돋보였다”(대한매일 10월 19일자)등 일부 진전된 면도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앞서 살펴본 흥미성 스케치 기사나, 부정적 보도 태도 그리고 사실나열적으로 가치중립적 태도가 과다한 경우 모두 국민들의 진지한 관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비판적 태도를 보이더라도 확실한 근거와 분석을 토대로 해야 하며 국감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비판은 삼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보도는 오히려 정치불신과 냉소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소수의 사례라 하더라도 사안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진지하게 조명하는 보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SBS가 국정감사 의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조명한 보도가 많았던 것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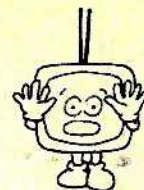
#### 4. 시민단체 보도

최초로 38개 시민단체가 구성한 시민연대의 의정감시 활동에 대해 방송뉴스는 일부 고발적 성격의 기사외에 대부분은 의원들과의 갈등이나 싸움장면 등 흥미성 기사였다. 그나마 몇 꼭지에 불과한 기사 중에서 의정감시단의 활동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방송사별로 보면 MBC와 SBS가 의정감시단의 입장에서 그들의 의정감시를 거부하는 의원들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인 반면 KBS의 보도는 시민단체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도하였다. 대표적 사례는 10월 7일자 <참관요구 몸싸움>보도다. 이 보도는 “급기야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의 국

	KBS	MBC	SBS	총계
긍정적	8(22.2)	24(45.3)	16(47.1)	48(39.0)
부정적	11(30.6)	14(26.4)	12(35.3)	37(30.1)
가치중립적	17(47.2)	15(28.3)	6(17.6)	38(30.9)
총계	36(100)	53(100)	34(100)	123(100)

<표-6> 방송 3사 메인뉴스의 국정감사 보도태도 (단위:건수(%))



방송사	월/일	제목 및 기사
KBS	10/1	<쫓겨난 시민단체> “국정감사 활동을 참관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국감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0/7	<참관요구 몸싸움> “국정감사 참관 허용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10/4	<국정감사 공개하라> “시민단체의 국정감사 감시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10/6	<“어디라고 들어와!”> “요즘 국정감사에서 정부기관을 평가하는 의원들이 역으로 시민단체들로부터 감시받는 심정은 어떤지 그 속내를 털어놓는 장면이 문화방송 카메라에 잡혔습니다...한 의원이 시민단체의 국감모니터 활동을 강도높게 비난하자 대부분의 참석의원들이 맞장구를 칩니다.”
	10/7	<“국감” 감시 몸싸움> “6일 뉴스데스크에서는 국정감사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깔끄러워하는지 그 목소리를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SBS	9/30	<국감 감시 신경전> “국정감사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신경전이 치열하지만 의원들과 시민단체의 신경전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9/30	<국감 평가 충돌>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가 국정감사장에서 또다시 얼굴을 붉히며 충돌했습니다...”
	10/7	<방청불허 끝내충돌> “시민단체의 국정감사 감시 활동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장 방청문제를 놓고 급기야는 국회의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이고 말았습니다.”

<표-7> 방송3사 메인뉴스의 국정감사관련 시민단체 보도내용

정감사가 시민단체의 참관요구 시위로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앵커 멘트로 시작하여 “오늘 한 시위는 결국 국회의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쓸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라고 맺고 있다. 마치 시민단체의 의정감시 활동이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이러한 보도는 시민단체들의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이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대체적인 평가와 정

면 배치되는 것이며 공영방송의 뉴스로서 더더욱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다.

#### 5. KBS 자사홍보성 보도

한편 KBS는 10월 8일 <방송법 공방>이라는 제목의 문화관광위 관련 보도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자리포트가 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KBS가 다른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공영방송인 만큼 더 분발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여야의원들은 또 캄첸중가 동반 취재도중 숨진 KBS 현명근 기자의 기자정신을 기리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서원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분히 자사 홍보성 내용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날 국감 현장을 모니터 한 시민단체 감시단에 따르면 “KBS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률 경쟁에 앞장서고 있고 방송보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한 KBS보도가 국감현장을 상당히 왜곡 전달했다는 비판을 가했다.

### III. 총평 및 대안

이상 살펴본 결과 이번 국정감사 관련 방송뉴스는 사안을 중심의제로 설정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등 과거와 달리 분명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신문, 방송 모두 여전히 사실나열적 공방보도나, 흥미성 스케치보도가 많았고 사안별 보도량에 있어서도 불균형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 또한 긍정적 면을 평가하는데 인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보도태도는 국민들로부터 국정감사에 대해 관심을 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지루함과 냉소적 태도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직접 의정감시 활동에 나선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갈등이나 사건 위주로 기사화하여 참여민주주의의 의의를 퇴색시켰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향후 있을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사건보다 국정감사의 내용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람보다는 사안이 중심 의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고발적 사안이 돌출되었을 경우 이를 흥미성으로 다루는데 그치지 말고 언론이 나서서 끝까지 추적보도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각 사안별 고른 보도량을 보여야 할 것이다. 공방보도를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으리라 본다. 더 나아가 뉴스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다수 국민들의 관심사와 이해관계를 충분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명확한 근거와 분석없는 ‘의원비판’은 가급적 삼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긍정적 면을 충분히 보여주도록 노력, 국민들의 무관심을 조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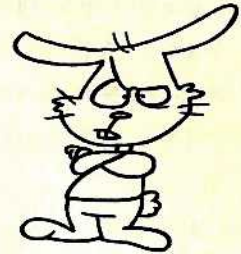
다섯째,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각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도 언론의 몫이다. 따라서 국정감사와 이를 수행하는 의원들을 조명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국감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보다 더 감시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언을 충분히 검토해보고 수렴한다면 보다 좋은 국정감사 보도가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본다.



## II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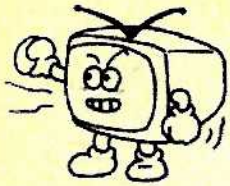
# '99 기획모니터 - 비보도부문



### 기획모니터 비보도부문

- ▶ 대학문화 예극, 고경관님 달려 못한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
- ▶ 청소년 문화에 대한 진지한 접근으로 다시 출발해야
- ▶ 금세기 최대 공연(?), 최악의 중계방송
- ▶ 성격별 이데올로기, 변신희성 드러낸 '개혁성 오락프로그램'
- ▶ 여성 상품화에 앞장서는 '공영방송' MBC





### 대학문화 왜곡, 고정관념 탈피 못한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

일요일은 즐거워 중 '캠퍼스 영상가요' (KBS 2 일 오후 7:00~8:00)  
 자유선언! 오늘은 토요일 중 '서바이벌 미팅' (KBS 2 토 오후 6:00~7:00)  
 캠퍼스 최강전 (KBS 2 수 오후 7:00~8:00)

대학생은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는 대표적 계층이다. 이는 여전히 학벌중심의 평가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사회적으로도 비교적 관대한 기준을 적용받는데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 사회비판세력의 한 축을 형성해왔던 점도 대학생들의 사회적 역할과 입지를 주목하는 요인 중 하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많은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생 당사자는 물론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중고생, 비슷한 나이의 직장인 등 그 시청 계층도 다양하다. 이 때 일부 계층의 선망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학생들이 화면에 등장하는 것은 대리만족과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그 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방송은 그동안 대학생의 이미지를 왜곡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학생들의 특정 이미지를 반복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문화 전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부추겼다. 일례로 80년대 말 90년대 초 대학생을 다룬 청춘 드라마가 현실의 대학생과 거리가 멀었던 점은 '이미지 왜곡'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모순된 현실과 싸우는 대학생의 모습은 극소수의 몇몇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었을 뿐이다. 최근의 대학생 관련 프로그램은 과거 청춘드라마에서 탈피, 또 다른 오락장르인 '쇼'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 쇼 프로그램에서는 허구라는 한계를 안고 있는 드라마와 달리 '직접출연'이라는 형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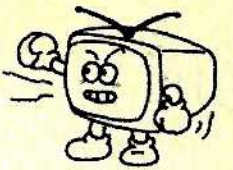
리얼리티가 가미된다. 그리고 이 리얼리티는 대학생 및 대학문화의 왜곡이라는 문제점을 은폐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된다.

현재 방청 참여 외에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은 KBS에서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었다. KBS는 [캠퍼스 영상가요(일요일은 즐거워 중)], [서바이벌 미팅(자유선언! 오늘은 토요일)], [캠퍼스 최강전] 이상 세 개의 프로그램에서 고정적으로 대학생 출연시키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오락 장르인데다 프라임타임대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률도 높다. 그러나 오락이라는 장르의 한계 때문인지 '진지한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채 대학생들을 오락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분석이다. 대학생들의 독창성 등은 찾아볼 수 없고 모방과 획일성으로 얼룩졌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또 이들 프로그램은 커플게임이나 미팅에 관한 내용이 많아 '연애'를 대학생의 주요한 문화로 그렸다. 물론 그 소재 역시 대학문화의 일부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으로 연애, 미팅 등의 소재를 다루거나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은 자칫 '대학생은 반드시 연애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 대학문화 왜곡 두드러진 '캠퍼스 영상가요'

일요일 오후 7시에 방영되는 KBS-2 TV [일요일은 즐거워]의 '캠퍼스 영상가요'는 커플들의 단합과 인내심을 검증하는 게임으로 시작된다. 이어 대



학생들의 장기를 맘껏 보여주고 타이핑 속도 대결이나 최근의 단체 줄넘기까지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대학생들의 이모저모를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대학문화를 획일화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지적받았다.

'너를 보여줘'라는 장기자랑 코너는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가장 잘 드러낸 코너다. 다양하고 독창적인 장기자랑보다는 최근 화제가 되는 연예인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몇 달동안 가수 엄정화씨의 '포이즌'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으며 몇몇 학교에서 2-3팀이 장기자랑 소재로 삼았던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또 특정 연예인 따라하기가 아니더라도 화려한 춤과 과도한 몸짓 등이 학교홍보성 뮤직비디오에 '출연 확정'이라든가 '비중있는 출연 확정'등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평가가 결국 위와 같은 장기자랑의 재생산을 유도, 다양한 장기자랑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았다. 심지어 모 대학에서 일등한 학생의 장기는 외국 TV에서 모방했다는 의혹을 산 바 있다. 이러한 장기자랑에서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나 창의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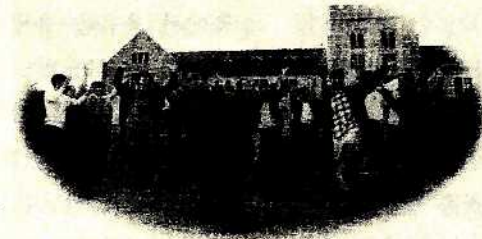
한편 진행자 강호동씨가 여학생들과 지나치게 신체접촉을 하는 것도 시청자를 불쾌하게 하는 요인으로 비판받았다. 성추행 논란이 일고 있는 지금 신중치 못한 진행자의 행동은 그것이 아무리 웃음을 위한 시도라 하더라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이 코너는 각 대학 캠퍼스에 직접 찾아가면서도 대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자보나 플랭카드의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각 대학의 홍보용으로 전략한 감도 없지 않다. 모 대학의 경우 당시 총장 인선을 둘러싼 마찰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학교 홍보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었다. 결국 방송을 통해 그

는 총장으로서 '공인'받은 셈이다. 진정 대학생들의 꿈과 문화를 담고자 한다면 다양한 모습과 의식있는 모습을 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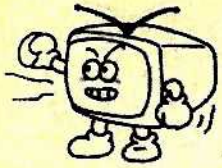
#### 심각한 사회현상을 웃음의 소재로 다룬 '서바이벌 미팅', 사회 고정관념 그대로 반영하기도

최근 IMF 구제금융 위기로 불거진 취업난은 이미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는 곧 사회의 경쟁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공동체 삶보다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바이벌 미팅>은 최근 사회분위기를 '악용'한 경우로 비판받고 있다. 남을 이겨야만 한다는 경쟁논리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왕따현상을 응용하여 웃음의 소재로 삼은 것이다. 또 캠퍼스 영상가요와 마찬가지로 '대학생=미팅'이라는 대학문화의 단면을 응용한 것이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문제는 외모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실형 현실의 미팅문화에서 드러나는 단면이라 하더라도 그 흔한 대화 한 번 없이 외모로만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외모로 평가하라고 시킨 바 없다'는 제작자의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프로그램 구성, 즉 순간적·일회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가 다른 평가 기준, 예를 들면 인간성이나 인품을 파악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이러한 외모지상주의는 특히 여성 출연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클로즈업하는 장면에서 극에 달한다.

두 번째, 특정인을 '왕따시켜' 탈락시키는 방식도 모자라 소금을 뿌린다거나 매를 때린다거나 하는 가학적 행위는 인격모독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탈락 후 무거운 음악과 함께 탈락자의 비애를 우스꽝스럽



게 비추는 것도 탈락자를 한번 더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의도적 연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 번째 획일화된 출연자 선정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남학생 대부분은 여학생들의 학교보다는 모두 좋은 대학의 학생이다. 여학생은 무용과, 항공운항과, 학교홍보모델 여대생 등이 많다. 더욱 문제인 것은 '능력있는 남자와 이쁜(혹은 여성스러운) 여자'로 배치한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사회 고정관념에 근거한 출연자 선정이 아닐 수 없다. 또 한편에서는 출연자가 반드시 대학생이어야 하는지 의구심을 표하기도 한다. 선정기준에 대한 방송사측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 재미도 유익성도 없는 캠퍼스 최강전

앞서 언급한대로 서바이벌 미팅, 캠퍼스 영상가오가 대학 전체 놀이문화의 왜곡반영과 출연자들을 오락의 도구로 전락시켜 TV 출연이라는 미끼를 통해 시청자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더 나아가, 인격 비하까지 서슴지 않고 흥미 위주 연출에 급급함으로써 출연자들을 방송의 상업주의에 이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캠퍼스 최강전'은 조금 다른 비판이 제기되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 겨루기를 통해 대학생들의 놀이문화를 보여 주려는 오락 프로그램인지, 각 대학과 학과를 소개하는 등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즉 오락적 요소인 장기자랑과 퀴즈 그리고 정보 제공차원의 학교 소개가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적절하게 배합되지 않아 재미도 유익성도 모두 상실했다는 비판이다. 무엇보다도 대결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프로그램의 어느 코너에서도 참가 대학생들의 창의성이 드러날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퀴즈의 수준 또한 매우 낮은 것도 대학생 참여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다.

결국 재미도 유익성도 없이 구성된 대학생 겨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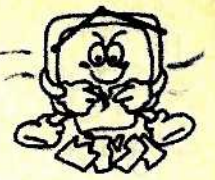
기 프로그램이 공중파를 통해 전국민에게 방영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우리 사회의 특수계층으로 자리잡은 대학생을 무더기로 불러들여 게임을 하는 것은 전과 낭비일 뿐만 아니라 대학이라는 경쟁대열에서 탈락한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소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총평 및 대안

이들 대학생 프로그램에서 사회문제, 진로문제에 대한 고민 등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들의 현실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흥에 겨운 모습만이 범람한 가운데 이들의 장기 역시 건전한 대학 문화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송사측에서 웃음을 유발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작위적 연출을 하지는 않았는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대학생 참여만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막상 출연해서 보여준 내용과 전체 편집을 통해 안방에 전달된 프로그램을 주체적 참여의 모습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포함 대부분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IMF 시대에 직면한 각 방송사의 출연료 삭감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방송의 주인이어야 할 시청자가 능동성을 가장한 수동적 존재로 전락, 이용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장르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오락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억지 웃음 유발이나 지나치게 작위적인 연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학생들에게 직접 제작하는 코너를 마련하여 좀 더 실질적인 대학 문화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대안으로 판단된다.



## 청소년 문화에 대한 진지한 접근으로 다시 출발해야

청소년에게 곱함 (MBC)  
 접속 신세대 (KBS)  
 드라마 '학교' (KBS2)

본회 방송모니터팀은 최근 방송 3사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모니터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 정리해보았다.

첫째,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시기로서 외부의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다른 어느 시기보다 청소년기에 미디어의 영향력을 크게 받는 것도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있다면 자칫 편협한 가치관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 프로그램은 장르, 소재, 가치관이 편재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여 청소년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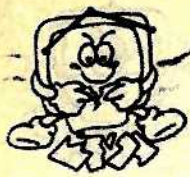
둘째, 우리 사회의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사회환경을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다. 그 첫 번째는 청소년을 둘러싼 퇴폐적 문화환경을 짚을 수 있겠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접촉은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음란 비디오, 만화, 잡지 등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유해 미디어 환경의 범주에 방송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에는 심야 토크쇼나 연예 오락·정보 프로그램이 많다. 이들 중 많은 프로그램들이 건전치 못한 내용을 내보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은 여성연예인을 성 상품화하

는데 단연 앞장서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지적에서도 잘 드러난다.

두 번째로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창의적 사고가 발휘되기 어려운 구조를 안고 있는 사회환경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청소년들의 고유한 문화가 자발적으로 형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비록 소수이지만 현존하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조명함으로써 좀 더 다양하고 독창적인 청소년 문화를 발굴해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청소년들의 학내외 동아리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제작자의 관심과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기존 청소년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청소년기의 매체 이용상의 특성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비롯한 매체 이용에 있어서 집단적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 연구결과다. 청소년을 겨냥한 문화상품들이 범람하고 시청률 경쟁에 빠진 프로그램이 많은 것도 바로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청소년의 매체 이용상의 특성을 이용, 시청률 경쟁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이상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매체 이용상의 특성, 우리 사회의 독특한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성세대의 시각, '학교'를 벗지 못한 소재**  
- 청소년은 선도의 대상이며 공부하는 학생일 뿐인가? -

현재 방영중이거나 불과 얼마전까지 방영되었던 방송 3사의 청소년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청소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졸속 기획으로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기존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청소년이 아닌 기성세대의 시각을 위주로 기획된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이는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드러나는 문제로서 대부분의 경우 연출자가 청소년 문화와 그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한 흔적을 찾기는 무리였다. 프로그램 이름만 바뀔 뿐 대부분의 청소년 프로그램은 기존의 틀을 그대로 옮겨 오거나 몇몇 오락 프로그램에서 인기있는 코너가 모방되기도 했다. 그러나 보니 청소년 프로그램은 생명이 짧은 경우가 많다. MBC에서 얼마전 종영된 [청소년에게 고향]이 대표적 사례다. 방송의 공영성 강화 분위기에 맞물려 지난 1월말 급작스레 방영을 시작한 '청소년에게 고향'이 3개월 동안의 시험을 실패로 마치고 종영한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 청소년을 선도의 대상으로만 파악하려 한 기획의 안이함이 가져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 외에도 방송에서 청소년은 주로 선도의 대상이었고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이미지가 여전히 우세하다. 일례로 청소년 프로그램 대부분이 특정 학교를 방문하고 학급을 찾아가는 형식을 띄고 있다. [학교] 등 청소년 드라마 역시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한 즐거리가 대부분이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꼭 학교를 중심으로 한 소재밖에 없는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생이고 그들 생활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현실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으로 학교 중심의 소재가 난무하는 것은 제작자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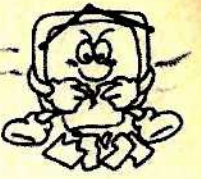
청소년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지 못했음을 반증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청소년에게 고향]과 [접속 신세대]는 모두 청소년이 직접 방송에 출연하고 제작에 참여하는 코너를 기획함으로써 기성세대 중심의 시각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는 평가다. 그러나 50분 동안 위의 세 코너로 구성된 것은 너무 한꺼번에 많은 애기를 다루려는 제작자의 욕심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피상적인 모습만 비출 우려도 제기되었다.

또 두 프로 모두 찾아가는 학교 대부분이 실업·공업계가 아닌 인문계 위주여서 출연 선정에 선입견이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청소년 프로그램 모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받았다. 청소년들의 연령층이 넓은데다 청소년 문제의 주인공들의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중학생에 대한 조명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4월 13일 종영된 드라마 학교(KBS)와 같은 프로그램은 기성세대가 바라본 청소년의 모습을 담기 급급했던 기존 프로그램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 드라마 역시 '학교'를 배경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참신성이 부족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을 실감나게 묘사한 것이 큰 장점



으로 평가받았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에게 고향**

[청소년에게 고향]에서 내세운 기획의도는 학부모와 청소년간의 거리를 좁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 프로그램은 형식상으로는 학부모의 뜻을 전하고(애들아, 들어라), 학부모가 직접 청소년의 공간인 학교에 찾아가고(엄마가 학교에 갔어요), 청소년의 입장을 전하는(학생수첩) 코너로 구성되어 있지만 철저하지 못한 기획과 준비 미흡으로 각각의 코너를 유기적으로 엮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청소년에게 고향'이라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을 선도의 대상, 훈계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지나친 연출의 개입으로 결국 방송을 만드는 주체는 기성세대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청소년에게 전하고 싶은 목소리만을 담고 있다.

**<애들아, 들어라>**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그곳에서 부모들이 청소년들에게 방송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좋은 의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성세대의 눈높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소에 듣던 일방적이고 훈계적인 목소리만을 담고 있어서 세대간의 이해의 폭을 좁히기에는 무리가 많으며, 마이크 앞에서 말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그려지고 있어 내용의 진지함마저 떨어지고 있다. 또한 타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을 짜집기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것도 프로그램의 참신성을 떨어뜨리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엄마가 학교에 갔어요>**

학부모가 일일학생으로 학교생활에 직접 참여하는 것 또한 좋은 기획이지만 작위적인 연출이 지나

치며 학교 생활의 단면을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복장불량으로 걸린다거나, 컨닝을 하다 들키는 모습, 학교 밖에서 점심을 먹고 들어오다 걸려 별받는 모습, 강의실을 못 찾아 헤매다 늦게 수업에 들어가는 모습 등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의 문제점과 고민을 깊이있게 다루기 보다는 흥미위주의 내용이 많다. 직접 학교생활을 체험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성세대의 추억거리에서 그치는 모습이 아쉬움을 남긴다.

**<학생수첩>**

학생들이 스스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영하고 있는 이 코너는 청소년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신선한 기획으로 평가받는다. 이 코너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함은 물론 다른 계층에게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꽃동네 자원봉사나 메이커 선호 문제 등을 다룬 본 코너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닌 깊이 있는 고민을 던져주고 있고 또한 그것이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프로그램의 군데군데에서 발견되는 소위 '요즘 잘 나간다'는 프로그램들의 모방적 장면은 시청률을 너무 의식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작위적 연출을 통해 감동을 유발하려는 모습이나 내용을 너무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한 장면은 오히려 진실된 목소리를 가려 버린 결과를 낳았다. 아무리 좋은 기획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철저히 준비되지 못하고 급조된 프로그램은 결국 좋은 프로그램으로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는 지적이다.

**접속 신세대**

이 프로그램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즘 청



소년들에 대한 신세대적인 여러 모습에 대한 방송국의 '접속'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의 세가지 코너로 구성되며 그 각각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 <골든벨을 울려라>

학교 공부 뿐만이 아닌 시사·상식 면에서도 뒤지지 않는 모습

이 코너는 기존 청소년 퀴즈 프로에 비해 시사·상식 등이 가미된 것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음악, 영화 등 좀 더 다양한 영역에 걸쳐 문제가 구성된다면 학교 교육에서 소외되었더라도 나름대로 전문 영역을 헤쳐가는 학생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제도권 교육의 한계를 벗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본 모니터 팀의 대안이다.

한편 최종 몇 문제까지 맞추느냐에 따라서 학교의 명예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불필요한 학교간 경쟁을 야기하거나 학교 홍보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 <내 마음을 받아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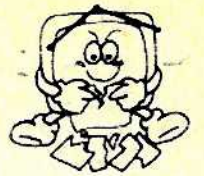
이성교체에 있어서 좀더 개방적이고 과감한 모습이 코너는 이성교체를 양성화시킨다는 바람직한 기획 의도를 갖고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짝사랑이 대부분인 청소년들의 이성교체가 자칫 흥미거리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코너를 보면 단순히 약속 장소에 나와 준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과장된 연출을 하고 있다. 상황 재현이나 학생들과의 인터뷰시 가미된 웃음의 장치도 마찬가지다. 그러다보니 방송사가 청소년들의 짝사랑을 뱉어주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제작비를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이성교체의 양성화라는 기획의도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건전하게 교제하고 있는 고등학생 커플이나 교체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현명한 대처 방법들을 다루어 보는 것이 좀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영상물에 대한 제작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곳곳이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대견스러운 모습

마지막 코너는 특별한 형식없이 구성되는 것으로서 청소년을 학교공부와 연관짓지 않은 채 좀 더 다양한 경험과 창의성을 가진 청소년상을 보여준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감 있고 깨끗한 청소년을 비추는 것도 매우 긍정적이다. 따라서 이 코너는 일반적인 신세대 개념, 그 중에서도 다소 소비적이고 즉흥적인 모습 등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보다 모범적인 상을 보여주는 좋은 코너다.

그러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공부, 연애, 풍부한 경험과 창의성, 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있



는 청소년의 모습을 비춘다는 취지가 은연 중에 '만능'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드라마 [학교]

#### "더 이상 왕따는 없다"

- 사실적 접근, 연출의 묘미가 돋보인 청소년 드라마 [학교]-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13일까지 방영된 드라마 [학교]는 기존 청소년 드라마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긍정적 평가다. 억지스런 이야기 전개, 스타시스템에 의존하는 출연자 선정 등으로 시청률 경쟁의 노예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일반 드라마와 분명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 출연자 대부분이 한번씩 주인공으로 선정되는 등 이 프로그램에서는 '왕따'가 없었다.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을 소재로 한 이 드라마는 현실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예를 들어 교재강매, 왕따, 교내폭력, 남선생의 여학생 성희롱, 촌지, 선생님에 대한 짝사랑, 성적문제, 교사 과외, 유흥가 출입, 여학생의 임신과 중절 등 실로 많은 문제들을 다루었다. 그 내용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였고 무엇보다도 '복선'을 이용한 드라마 구성은 연출의 묘미를 돋보이게 했다. 기존의 '모범생' 위주의 이야기 전개는 없었다. 반장조차 모범생과는 거리가 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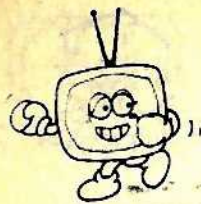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을 칭찬해주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각 방송사가 간판 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하는 9시 뉴스 이후 시간대 편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시간대는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 교사 등 많은 계층들이 학교 현실을 관심있게 바라보기에 좋은 시간대라는 점에서 그동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청소년 드라마의 '명예회복'이다.

이밖에도 연기자들의 뛰어난 연기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각 회마다 주연급으로 다루어졌던 학생들의 심리연기가 매우 자연스러웠다는 평가다.

반면 아쉬운 점도 지적받았다. 문제 해결이 수월하게만 매듭지어진다는 점, 특정 인물의 성격이 과장, 이로 인해 내용의 전달보다는 인물의 개성을 부각하는데 치우쳐 가는 경향을 보였던 게 비판의 대상이다. 이러한 점을 빼면 드라마 [학교]는 근래에 보지드문 좋은 드라마로 보아 무리가 없다.

### 대안을 위해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청소년 등 비록 소수일지라도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는 학교 생활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학생들 못지 않게 필요하다. 청소년 문화에 대한 접근이 학생들의 다양한 자치활동보다는 '방송반' 등 특정 동아리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구태의연한 시각도 벗기를 바란다.



「세계 전쟁 희생자와 불우 어린이 돕기를 위한 마이클 잭슨과 친구들」 공연  
- What More Can I Give 중계방송 및 관련 방송 모니터

## 금세기 최대 공연(?), 최악의 중계방송

1999. 6. 24 ~ 25

「세계 전쟁 희생자와 불우 어린이 돕기를 위한 마이클 잭슨과 친구들」 공연  
- What More Can I Give 중계방송 (SBS)

지난 6월 25일 잠실 주경기장에서는 「세계 전쟁 희생자와 불우 어린이 돕기를 위한 마이클 잭슨과 친구들」 공연- What More Can I Give 공연」(이하 「마이클 잭슨과 친구들 공연」)이 열렸다. SBS는 이 공연을 중계방송하였고, 이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시청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금세기 최대의 공연 중계 방송치고는 준비가 너무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우리 방송계의 수준마저 의심스럽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웠다.

사실 「마이클 잭슨과 친구들」 공연은 공연 자체로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한국전쟁이 일어난 6월 25일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비싼 입장료가 그렇다. 이밖에도 출연진들의 잦은 교체, 예고도 없이 30분 일찍 공연이 시작된 점, 전쟁과 기아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코믹 연기로 주목받고 있는 아역 텔런트가 한국의 어린이 대표로 뽑혔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공연 자체는 차치하고서라도 공연이 방송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진행자의 자질문제를 비롯, 예고 방송까지 어겨가며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하는데 열중한 SBS가 결국 매끄러운 공연중계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시청률에만 신경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청률이 광고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SBS의 태도는 시청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상업적 이익에 더 관심을

두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욱이 공연 중계 이후 통신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SBS는 성의있는 답변을 보이지 않고 있어 시청자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 진행자들의 자질 문제

이날 공연 현장에서는 김연주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있었고 SBS는 배철수, 양승연씨의 사회로 중계방송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진행이 매우 미숙하여 진행자의 자질이 부족했다는 비판이다.

각 팀의 공연이 끝나고 무대 세팅을 하는 동안은 진행자들의 매끄러운 진행이 필요했다. 그러나 진행자들은 공연 사이의 팀조차 사전에 알지 못했다. 또



관중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 듯 하면 그제야 ‘아, 이제 공연이 시작되나 봅니다.’라며 ‘보시죠’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는 공연 중계를 하면서 사전에 행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조차 숙지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바로 공연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배철수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출연자에 대해 얘기하고 양승연씨는 ‘네, 네. 그렇군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여자 진행자는 어색한 웃음과 엉성한 말대답만으로 방송을 진행하였다. SBS는 ‘금세기 마지막 빅쇼’라고 하는 대공연 중계방송을 탄탄한 대본 하나없이 어떻게 감행할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시청자에 대한 배려 부족

이날 공연 중계방송은 시청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카메라는 무대 세팅이 진행되는 동안 비출 것이 없을 때면 하늘에서 잡은 시꺼먼 주경기장 야경을 종종 비추었는데 이 또한 사전에 준비한 영상물과 사회자의 즉석 멘트로 예상보다 길어지는 공백을 메우지 못하게 되면 보잘 것 없는 경기장 야경만을 원거리로 비춘 것이다. 사전에 공백 기간이 다소 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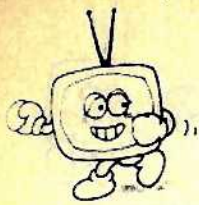
가수나 곡목의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 탄탄한 대본을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운드 또한 주말의 가요 프로그램 녹화 방송만도 못한 수준이었다. 현장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달하기는 무리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날 중계방송의 사운드는 안방 시청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통역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문제였다. 이날 공연에서는 S.E.S와 H.O.T, 그리고 유진박을 제외하고는 영어권, 프랑스어권의 가수들이 대거 출연했다. 그러나 방송 상에서는 이들이 공연 가운데 몇마디 하는 말들이 통역 없이 그냥 내보낸 것이다. 보이즈투멘이나 머라이어 캐리, 바네사 메이는 단순한 인사말 뿐만이 아니라 제법 의미있는 멘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역이 전혀 없었다. 마지막 마이클 잭슨 공연 때는 사회를 맡은 양승연 아나운서가 동시 통역을 했으나 매끄럽지 못했고 부분적으로 발췌되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알아듣고 있던 시청자들마저도 이해하는데 방해받을 뿐이었다.

차라리 처음부터 곡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출연자들의 멘트가 화면 아래 자막으로 나왔으면 더 나을 뻔 했다. 그러나 정작 자막 사용은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 공연 중간 중간에 화면의 3분의 2를 넘게 차지하는 자막의 내용을 보면 ‘자유수호전쟁 6·25……희생자들을 기리는……’과 같은 내용이다. 이날 공연은 6월 25일 이루어져 애초부터 말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SBS가 이러한 비판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내보낸 것으로 보이는 위와 같은 자막은 오히려 해프닝처럼 보였다는 지적이다.

SBS는 물론 최근 과다한 자막 사용으로 시청자들을 우롱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방송이 앞으로는 적절한 시기와 내용을 선별하는 등 자막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제멋대로 삭제, 편집

공연은 4부로 나뉘어져 방송되었다. 당연히 현지에서는 공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1부가 끝나고 나서는 SBS 8시 뉴스가, 2,3부와 3,4부 사이에서는 꽤 많은 양의 광고가 들어갔다. 당연히 시청자들은 광고 때문에 몇몇 공연을 놓칠 수밖에 없었다. 중계 도중 무대 세팅 시간에 이런 공연들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이 또한 현장 상황에 따라 중간 중간 끊어진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편집과 삭제 때문에 방송으로 공연을 지켜본 사람들은 공연의 흐름을 번번이 깰 수밖에 없었다.

### 공연 관련 홍보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제점 - 「한밤의 TV연예」(SBS)

6월 24일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는 「마이클 잭슨과 친구들 공연」 리허설 장면을 방송한 바 있다. 여기서는 거의 한시간 가량을 별 내용도 없이 그저 현지의 상황을 비춰주는 것으로 방송을 내보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날 「한밤의 TV 연예」는 이승환의 라이브 공연 소식이 방송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런데 마이클 잭슨 공연 리허설 중계에 밀려 미리 예고된 내용을 방송하지 않은 것이다. 「한밤의 TV연예」가 예고내용을 방송하지 않은 경우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밤' 제작진은 지난 3월 20일 「열린 TV 시청자 세상」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또 이렇다 못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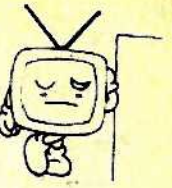
SBS가 대공연을 중계한다는 사실에 너무 흥분한 것은 아닌가. 방송은 약속이다. 특히 시청자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기본적인 방송 규칙까지 무시한 SBS는 시청자들의 비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공연 관련 보도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제점 - 「SBS 8시 뉴스」와 「KBS 뉴스 투데이」

공연 중간에 방영된 「SBS 8시 뉴스」와 「KBS 뉴스 투데이」에서는 공연 상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대만의 여가수 코코리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방송했다. 다른 많은 남자 가수, 여자 가수들이 공연을 이미 마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코코리의 관능적인 공연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준 것이다. 이는 여성을 하나의 볼거리 이상으로 보지 않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 시각의 발로라는 점에서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가학성 오락프로그램 모니터



### 성차별 이데올로기, 반사회성 드러낸 '가학성 오락프로그램'

일요일은 즐거워 (KBS2 일 저녁 6시50분 ~ 8시)  
일요일 일요일 밤에 (MBC 일 저녁 6시50분 ~ 8시)  
서세원의 슈퍼스테이션 (SBS 일 저녁 7시 ~ 8시)

이제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노래나 연기, 춤뿐만 아니라 '담력'이 필요하다. 최근 각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의 '담력'을 시험하는 코너가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말 황금시간대가 되면 시청자들은 스타들의 울음과 비명소리를 들어야 하고 남의 고통을 즐기는 가학증 환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공포체험과 위험한 레포츠류. 이 두가지가 최근 두드러진 '가학방법'이다.

여름만 되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공포체험은 귀신이나 괴물 등 공포영화의 소재를 이용, 연예인들이 공포에 떠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방영하고 있다. 이런 코너의 공통점은 겁이 많은 여자연예인들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남성을 동반시킨다는 점이다. [서세원의 슈퍼스테이션 <공포극복 흥가에서의 하루>](SBS 일 7:00 ~ )와 [일요일은 즐거워 <공포데이트>](KBS2 일 6:50 ~ )가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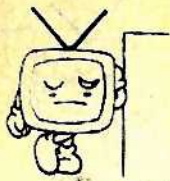
지난 7월 11일 방영된 [일요일은 즐거워 <공포데이트>] '이나영 임창정 편'에서는 이나영이 무서워할 때마다 임창정이 안아주는 장면이 반복되었다. 시청자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였다. [서세원의 슈퍼스테이션 <공포극복 흥가에서의 하루>]에서도 서세원은 아예 공포탐험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연약한 여자를 남성이 보호한다'는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성차별적 시각은 다른 방식으로도 표출된다. 예를 들면 임창정, 최지우가 출연했던 7월 4일 <공포데이트> 방영분에서는 임창정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매우 강조하며 "여자를 버리고 도망가는..", "여자보다 더 놀라는.." 등의 자막과 진행자 멘트로 웃음을 유발했다. '남자는 여자보다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남성우월적 시각을 전제로 '강한 남성' 콤플렉스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시각은 레포츠류의 공포체험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공포체험 119'에서 주영훈이 공포에 떨었던 모습은 지금도 많은 시청자들의 뇌리에 남아있을 것이다. 낙하훈련을 피하려는 주영훈을 붙잡아 옥상에 앉혀놓고 그가 울고, 피로워하는 것을 "벌써 00시간째", "000하며 우는" 등의 자막으로 그의 공포를 웃음과 재미의 요소로 만들었다. 이러한 내용은 그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무서워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며 '남자는 무서워하면 안된다'는 전제를 담고 있는 것이다.

### 감정의 상품화, 반사회성 조장비판

그동안 화려하게 보였던 연예인들의 모습은 일반 시청자들에게 '나와 다르다'는 괴리감을 주었고 대리만족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주었다. 그런데 이들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의 박탈감에 대해 보상해준다. 동시에 '남의



고통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비인간적 가치조장도 불가피하게 된다. 또 출연 당사자에게는 공포감이지만 안방 시청자는 웃게 된다. 이는 하나의 현상을 두고 출연자와 시청자간의 감정이 이원화되는 것이며 감정의 공유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통합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성을 담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편 이들 프로그램이 아무리 공개를 전제로 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출연자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한 개인에게 속한 고유한 것이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시청하다보면 출연자들의 감정표출은 일부 연출된 것을 제외하고는 즉각적이어서 감정의 은폐가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이들 프로그램에서는 몰래카메라식의 기법으로 시청자들에게 '관음증'적인 시선까지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개인감정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방송을 통해 노출된다는 것은 감정을 상품화한 것이자 출연당사자 인격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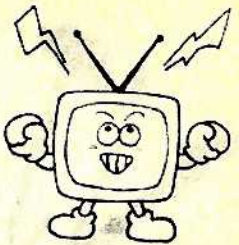
이러한 일련의 비판은 '공포물'이 오락프로그램의 소재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빚어진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면 '전설의 고향'류의 공포드라마는 그 자체로 공포감을 전달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그러나 위의 오락프로그램은 웃음이 불가피한 오락장르이다. 공포감을 조성하며 오락기능을 수행하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 냄비식 기획 지양하고 출연진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오락프로그램 개발해야

매년 여름마다 등장하는 '귀신체험', 냄비식으로 개설한 '극기훈련' 코너들, 모두 안일한 기획이 아닐 수 없다. 또 '전통있는 코너', '극기훈련' 운운하며 과대 멘트를 남발한다거나 '스타' 출연진, 과도한 편집과 자막 등은 이 프로그램이 내용으로 승부하기 보다는 억지스런 연출기법에 의존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학성 오락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신문지면을 통해서 여러 차례 비판받은 바 있다. [일요일 일요일밤에](MBC)의 경우 비판여론을 의식해서 <소방훈련> 코너를 폐지하기도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도 면피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소방훈련> 코너만 폐지했을 뿐이며 또 다른 형식의 가학성 프로그램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요일 일요일밤에](MBC)는 7월 25일 드라마 왕초팀이 번지점프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오는 8월 8일 방영분에서는 스카이다이빙하는 장면도 방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일은 즐거워](KBS) 역시 지난 8월 1일 텔런트 송윤아가 암벽등반하는 장면을 방영했다.

각 방송사가 사고에도 아랑곳 없이 '가학성 프로그램'들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사들은 일회성 포즈로 비판여론을 잠재우려하지 말고, 출연자들과 시청자 모두가 부담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오락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예산 부족과 시간 부족이라는 핑계로 연예인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즐거워할 것인가. 시청자들은 더 이상 '가학'으로 웃음을 강요받고 싶지 않다.



## 여성 상품화에 앞장서는 '공영방송' MBC

1999. 5. 17 ~ 24  
미스코리아 대회 중계방송 (MBC) / 백야 (MBC) / 임성훈 이영자입니다 (MBC)

지난 5월 23일 MBC를 통해 생중계된 미스코리아 대회 중계방송은 방송의 역할에 다시 한번 의문을 갖게 했다. 해마다 개최되는 미스코리아 대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가 행사인 양 비쳐지는 이유는 바로 방송을 통해 생중계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가 이 대회를 생중계 하는 것은 방송중계를 통해 얻게 되는 광고 수익에 눈이 먼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MBC는 대회 생중계에 그치지 않았다. 이미 5월 17일 토크쇼 [백야](오후 11:00~50)를 통해 미스코리아 후보들의 합숙현장을 스케치했고 22일에는 전야제를 통해 그리고 대회 다음날인 24일에는 [임성훈 이영자입니다](오전 9:45~10:45) 와 [백야](오후 11:00~50)를 통해서도 미스코리아를 다루었다. 이전의 경험을 볼 때 이후 많은 오락 프로그램들이 미스코리아를 모셔가기 경쟁을 벌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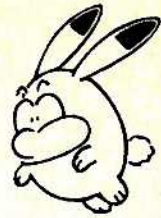
이와 같은 방송태도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미인대회를 정당화한다는 점이다. 대표적 미인대회인 미스코리아 대회는 획일적인 미의 기준, 외모지상주의 조장, 여성상품화, 연예계 등용문으로 전락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자기개발을 위한 투자보다는 외모성형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풍조도 이러한 대회를 다루는 방송의 태도가 빚어낸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BC는 4월 27일 PD 수첩을 통해 성형수술의 허와 실을 점검하고 내적인 아름다움보다 외형적 미를 중요시하는 세태를 비판한 바 있다. 뉴스보도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룬 바 있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미인대회 중계방송을 통해 이를 조장하고 한편에서 이를 비판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 중계방송을 통해 보는 미인대회에서 국가적 경제위기 사태라는 절박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대회 사회자였던 백지연씨는 무려 5번이나 의상을 갈아입었으며 대회 출전자들의 화려한 의상은 늘어가는 실업자와 노숙자 등의 사회문제에 아랑곳없었다. 다같이 국난극복에 참여하자고 여론조성에 나섰던 방송 아닌가. 최근에는 파업하는 지하철 노동자들을 향해 경제위기 운운하며 비난에 열을 올리던 MBC 뉴스보도를 많은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번 중계방송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선정적인 화면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수영복을 입은 후보자들의 포즈는 물론 수영장에서 비를 맞는 장면 등은 노래방에서나 본 듯한 선정적인 장면이다.

또 후보자들과의 인터뷰는 형식에 불과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살려보려 했던 인터뷰는 그러나 취지를 살리기에 역부족이었다. 대개의 답변이 수준이하였고 결과적으로도 답변의 내용이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일례로 일차 관문을 통과했던 후보 중 제주 4·3 항쟁 진상규명이나 농촌문제를 언급한 후보들은 탈락했다.

5월 15일 문화일보홀에서 개최되었던 '안티 미스코리아' 대회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대회에 대한 비판여론은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방송은 이제 비판여론에 주목하고 미인대회를 비판하는데 나서야 옳다. 전야제, 중계방송도 모자라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모셔가기 경쟁을 벌이는 것은 '공영방송 MBC' 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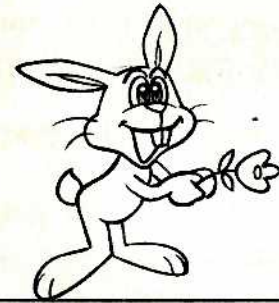
## [ 비디오저널리스트(VJ)강좌 ]

타가을 퍼블릭 액세스 시대를 대비하고자 시민 제작자 양성을 위해 구성된 강좌.  
**ONE-MAN SYSTEM,**  
 즉 기획에서 편집까지  
 '다홀로'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강좌.

<p>● <b>강사</b>          송덕호(인터넷 방송 '다인' 최재팀장)          안여름(아시아프리스인터넷서널 서울사무소 대표, VJ)          박수탁(SBS보도국 기자)          여창재(Q저널 아시아리포터팀장)          임상덕(대안권 사무총장)          김대준(노동자노동계적단 대표)          김중현(다크컴독)          윤영진(VJ)          변영주(다크컴독)</p>	<p>● <b>강의내용</b>          VJ란 무엇인가? / VJ와 시민연륜운동 / 전보적영상운동 /          VJ와법 / 다크컴독의 구성</p> <p>● <b>실습</b>          뉴스만들기 (기사구성요건 · 취재와 인터뷰/과제발사 · 토론 · 평가)          미니다크만들기 (기획/구성)          촬영 (카메라 기초 · 원리와 특성/영상언어의 이해/카메라의 대상과          의 관계/사운드와 조명/현장촬영 · 인터뷰)          편집 (뉴스편집 · 편집실습/후반작업개괄 · 편집이론/작당기 · 오고          기 · 뒤서/컴퓨터 편집의 실제/덕성)          야외촬영(현장실제)</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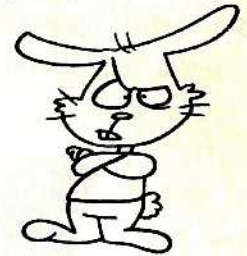
기간 : 3개월 매주 월·수 7-9시, 총21강좌

수강료 : 400,000원



## IV

## '99 외부 기고문



### 외부 기고문

홍익대학보

▶ 서의적절한 소재, 일목요연한 편집정리가 돋보인 프로그램

▶ 풍속 프로그램이라는 벽만 못했거나

▶ 오랜 단계, 무전 연역

▶ 다양한 주제와식 돋보인 시사그날 프로그램

▶ 5·18 광주항쟁 관련 방송 편성 문제였다

▶ '말레니엄 프로그램'으로 언급 근대사 프랑아가

▶ 그외적 문제에 대한 변호의 요구

▶ 흥재와의 협수김

▶ 생명을 담보로 한 KBS의 '말레니엄' 계획

▶ 언급 정서의 여다운 단계를 보여준 프로그램

▶ 작가비판의 한계 깨달어 드러나는 음보즈만 프로그램언급 정서의

여다운 단계를 보여준 프로그램

인천교대학보



### 시의적절한 소재, 일목요연한 쟁점정리가 돋보인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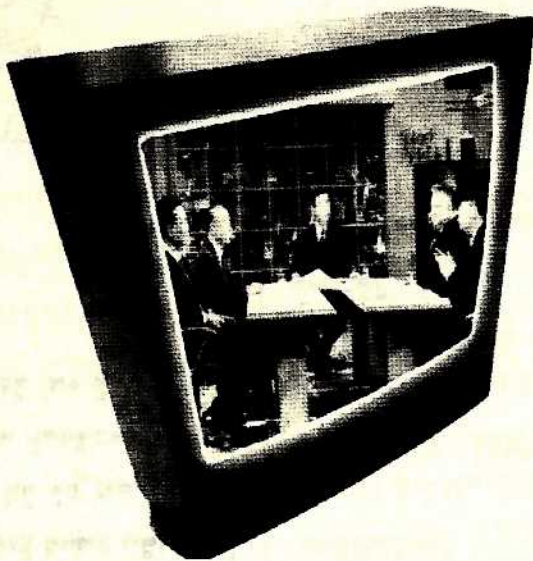
<길종섭의 쟁점 토론> '영월댐 건설'  
(KBS 1TV 3월18일 오후 10:00~11:00)

김성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방송모니터분과 회원)

강원도 영월댐 건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착공계획이 반대여론에 부딪혀 일단 유보된 상황이었지만 지난달에 다시 댐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건설교통부의 방침이 나오자 다시 거센 반대가 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3월 18일 KBS 1TV에서 방영된 <길종섭의 쟁점토론>은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영월댐 건설에 대해 방송사가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다.

이날 토론회에는 관련 부처의 공무원과 학자 그리고 환경운동단체 관계자가 각각 찬반입장을 대표하여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영월댐 건설을 찬성한 측이 토론회에 대한 준비미흡과 논리상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를 들면 정관수 교수는 논리적인 자기주장이나 정확한 문제제기없이 일반 시청자가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를 남발하고 핵심 쟁점에서 벗어난 내용을 나열, 토론회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물론 같은 편으로 나온 강중수 한국수자원공사렘본부장은 2010년부터 나타날 물부족 문제나 매년 발생하는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댐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비교적 논리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강 본부장은 반대편



의 문제제기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반론없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반대입장을 편 정동양 교수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도 언급을 회피하는 등 논리의 허점을 보이기도 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댐건설을 반대한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장은 한강유역의 물수지 분석의 문제점, 용수부족량 예측비교의 부정확성을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고 동강 유역의 생태계 및 문화유산을 자세히 소개하는 등 많은 자료를 준비한 노력이 엿보였다. 같은 입장에 선 정동양 교수 역시 누수에 관련한 대책과 물이용을 합리화하고 수요관리위주의 수자원계획, 요소요소에 홍수저지용 외목적 댐 건설 등 현실적

대안 위주의 토론이 돋보였다. 그러나 정교수는 상대방 발언 중간에 끼어들어 결과적으로 난상토론을 유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토론회는 영월댐 건설을 찬성하는 측의 준비부족 논리결여 등을 제외하면 소재도 시의적절했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핵심 쟁점 사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시청자들에게 전달 효과도 높았다는 긍정적 평가다.

### 졸속 프로그램이라는 비판 못벗어나

<이것이 인생이다> '시인의 아내'  
(KBS 1TV 4월 1일 오후 7:35~8:30)

김성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방송모니터분과 회원)

저항시인 김남주. 그는 시인이라기보다는 전사로 불려왔다. 암흑의 시대. 옥중에서도 계속된 절대권력을 향한 저항의 목소리는 칼처럼 비수처럼 내리꽂혔고 민주화를 위한 시위현장에서 그의 시는 노래가 되어 불렀다. 또한 그의 시는 아내인 박광숙씨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그들은 방송에서 금기시해왔던 인물들이라 방송을 통해 접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을 소재로 다룬 휴먼다큐가 있어서 눈길을 끈다. KBS1TV에서 방영된 <이것이 인생이다> '시인의 아내'가 바로 그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인 김남주씨와 그의 동지이자 아내인 박광숙씨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 박광숙 없는 박광숙 인생이야기

그러나 적절한 소재선정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완성도까지 담보하지는 못한다. 이 프로그램 또한 몇가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첫 번째 지적은 주인공이 박광숙씨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전개가 지나치게 김남주씨에게 치우쳤다는 점이다. 김남주 시인이 살아생전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랑했던 여인이 박광숙씨였다는 점만이 지나치게 부각이 되어 박광숙씨 개인의 삶을 이해하는 데는 미흡했다. 박광숙씨는 왜 민족해방전선이라는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연고로 김남주 시인을 10여년간 옥바라지를 해왔는지, 짧지 않은 시간동안 무슨 일이 있었

고,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성의 사회적 입지가 여성의 사회적 입지까지 결정짓는다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의 결과는 아니냐는 조심스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어설픈 재현 드라마가 사실성 떨어뜨려

이 프로그램에서 또하나 지적받는 것은 표현기법의 문제이다. 전체 50분 프로그램에서 약 30분은 재현된 드라마에 간간이 박광숙씨의 인터뷰가 삽입된 형태이며, 약 20분은 나레이션을 중심으로 현재의 박광숙씨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 먼저 앞부분의 재현 드라마는 엉성하게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연기력도 떨어지고 배경이나 소품도 시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를 못해서 오히려 사실감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변사람들의 다양한 인터뷰가 첨가되지 않아 객관성도 크게 결여되었다. 뒷부분 또한 지나치게 나레이션 위주의 일방적인 주입식으로 구성이 되어 사실 전달에 있어서 크게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우수한 소재의 선정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의 미숙함과 노력부족으로 졸속 프로그램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 유전 면제, 무전 현역

<추적 60분> '긴급진단 병역비리'  
(KBS 2TV 5월 6일 오후 9:50~10:50)

김성진 (민주언론운동서면연합 방송모니터분과 회원)

지난 27일 김·군·경이 참여한 병무사범 합동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서울지역에서 병역비리를 집중수사한 결과, 브로커를 통해 군의관에게 돈을 주고 아들이나 자신의 병역을 면제받은 기업인, 교수, 의사, 연예인, 운동선수 등 청탁자 135명과 브로커 56명, 군의관 16명 등 20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한겨레신문 4월28일자)

이로써 '국방의 의무'를 '뇌물'로 대신하는 병역비리가 사회지도층에서 온존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돼 병역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6일 방영된 추적 60분 '긴급진단, 병역비리'는 이같은 여론을 수렴, 고질적인 병역비리의 근본적인 발생 구조와 원인을 파헤쳐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긴급진단'은 청탁자, 브로커, 군의관으로 이어지는 병역비리의 커넥션을 밝혀내 몇사람의 개인적 범법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또 비리의 사슬구조를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으로 신체검사과정의 허술함과 신뢰할 수 없는 추상적인 면제판정 기준, 비리를 저질러서 받게되는 특혜에 비해 턱없이 경미한 처벌, 군대 보내기가 무서우리만치 잦은 사고와 사건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진상규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군사회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병역비리를 단순한 뇌물공여 사건으로 볼 수 없으며 전반적인 병역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사건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돋보였다.

또 이러한 병역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는 병역의무가 형평에 어긋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신질환, 간질환 등 진짜 면제대상인 서민들이 뇌물을 제공하고자야 면제판정을 받고, 그나마 '능력'이 없을 경우 탈영병 신세가 되는 어이없는 사례를 통해 잘못된 병역제도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긴급진단'은 병역비리의 구조적인 모순과 피해, 해결책을 제시했음에도 후반부에 설득력 없는 대담을 끼워넣어 전체적인 구성을 흐트러리고 말았다. 서울지방병무청장과의 대담이 바로 그것. 이날 출연한 김두성 병무청장은 병역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일관되게 주장한 제작진의 의도를 비껴나는 답변으로 프로그램 전체 맥락에 설득력을 떨어뜨렸다.

병무제도를 관리하는 관료의 입장도 들어본다는 제작진의 의도가 '변명의 여지'만 준 채 끝났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 다양한 주제의식 돋보인 시사고발 프로그램

김성진 (민주언론운동서면연합 방송모니터분과 회원)

지난 5월12일 방영된 MBC <PD수첩>의 '이단파문, 이재록 목사!-목자님, 우리 목자님!'은 해당 교회 신도들의 방송사 점거 사태에 힘입어(?) 39.6%(점유율 49%)라는 경이적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난 90년 5월 이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시작한 후 최고다.

한편 지난 3월 20일에는 SBS <문성근의 다크세상-그것이 알고싶다>가 국제크리스천연합(JMS)의 실체를 조망하는 '구원의 문인가? 타락의 문인가?'를 방영,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둘의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금기영역으로 군림해온 종교문제를 정면으로 파헤쳤다는 점과 외부의 온갖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방영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올 상반기 전반적인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98년엔 IMF한파로 인해 방송사에도 제작환경에 적잖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불행히도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불어닥친 바람은 다름아닌 황색저널리즘의 바람이었다. 흥미위주의 선정적이며 자극적인 소재가 난무했으며 몰래카메라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시청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99년 들어서 이같은 경향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찾아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주제의식이 담긴 프로그램이 많이 제작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동안 성역으로 간주되었던 정치권력의 비리나 재벌의 부정부정(사회지도층, 그들만의 결혼식-PD수첩 4/6), [실태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추적60분 2/22], [현장점검, 재벌은 지금 개혁 중?-추적60분

3/22], [현장추적, 빛나간 상류의식-추적60분 4/29]과 공무원의 부패실태([정부돈은 눈 먼 돈?-PD수첩 1/4], [병역비리 끝이 없다-추적60분 5/6])를 적나라하게 파헤친 프로그램은 호평을 받기도 했다.

그외에도 지역감정 조장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돋보인 [누가 지역감정을 말하는가? (PD수첩-2/5)], 양심수 석방문제를 계기로 현 정권의 인권정책을 조명한 [사면논란 장기수, 그들은 누구인가?(추적60분-2/22)]·[특사, 그래도 남은 문제(PD수첩-2/26)], 두만강 접경지역의 생생한 기록을 통해 북한동포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 [두만강 르포, 꽃계비들의 강타기(그것이 알고싶다-2/18)], 방송개혁의 현황과 문제점을 밀착취재한 [방송개혁, 어디로 가는가(PD수첩-3/20)], 5월 항쟁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조명한 [80년 5월, 이 얼굴들을 아십니까?(PD수첩-5/18)]·[공개수배 사건25시(K2-5/19)] 등은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냈다는 평가가다.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은 여전히 선정적인 소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사건재연 프로그램의 경우 범죄예방이라는 애초의 기획의도와는 달리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모방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또한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제작방법은 제작자의 자율규제노력, 새로운 취재방법의 개발 등과 함께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본격 탐사저널리즘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5·18 광주항쟁 관련 방송 편성 문제있다

이유경 (민주언론운동서면연합 간사)

올해는 광주항쟁 19주기 해다. 전두환, 노태우 등 광주학살의 주범들은 법정에서 그 죄과를 심판받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광주항쟁 당시 신군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았던 현 김대중 대통령이 그들을 사면했다. 전·노씨에 대한 사면을 두고 일각에서는 용서와 화해의 차원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더 나아가 5·18 항쟁 자체에 대한 전면적 용서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은 반성없는 학살자들에 대한 사면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진상규명과 당시 열사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화해와 용서 운운하는 태도는 항쟁의 의미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18일 각 방송사가 보여준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우선 방송 3사는 5월 18일 오전 10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중계했다. 그리고 MBC의 경우 18일 PD수첩 [80년 5월 이 얼굴들을 아십니까]라는 주제로 광주항쟁 특집 프로를 방영했다. KBS는 5월 16일 [정수복의 세상읽기]에서 윤한봉(광주항쟁 관련 마지막 수배자), 안병욱(카톨릭대 역사학과) 교수를 초대하여 5·18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또 5월 19일 [공개수배 24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80년 당시 실종자들을 '수배'하는 형식으로 광주를 다루었다. SBS는 광주 관련 프로그램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편성방향은 방송사가 의도했든 그렇지 않은 마치 광주의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끝난 것처럼 여론을 주도하는 현 정권과 보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나마 기념식 중계프로를 제외한 나머지 세 프로그램들이 아직 완결되지 못한 광주문제를 호소력 있게 다루었다는 평가를 받은 건 다행이다. 특히 [PD수첩]의 경우 학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도높게 주장,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을 강조했다. [공개수배 사건 24시]의 경우는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실종자들을 애타게 찾는 가족들의 아픔을 간절하게 그렸다.

현 정권은 지역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두환씨 측근을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 정치인들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씨 역시 최근의 행보에서 정치에 대한 직간접적 재개를 짐작케 하고 있다. 역사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광주항쟁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고자 하는 방송이라면 이러한 최근의 흐름에 썩기를 박을만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야 한다. 그러나 방송 3사 총 3개의 프로그램 정도라니. 3·1절, 광복절이 되면 관련 드라마도 많이 제작하는 우리 방송이 왜 5·18에 대한 드라마는 제작하지 않는 것일까? 진지하게 묻고 싶다.



### '밀레니엄 프로그램'으로 한국 근대사 조명하기

이유경 (민주언론운동서면연합 간사)

요즘 각 방송사마다 '밀레니엄 프로그램'을 기획, 방송하고 있다. MBC의 [한국 100년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와 KBS의 [20세기 한국사 해방시리즈]가 그 대표적 프로그램. MBC의 경우 재미와 분석을 조화롭게 다룬 반면 KBS는 분석적이면서도 무언가 메시지를 담으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KBS는 특히 '식민으로부터의 해방',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해방', '성으로부터의 해방',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등 '~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일단 사회성 짙은 내용이다. 흥미와 진지함이 느껴지는 소재 선정 역시 1900년대의 의미를 여러모로 담고 있어 밀레니엄 프로그램으로서 적절하다는 평가다. 몇 가지 방영분을 보자.

'식민으로부터의 해방'(8월 11일 방영)에서는 근대 지식을 무기로 한반도를 지배한 일본과 그에 적극 동조했던 이광수의 근대화론과 그 근대화론의 모델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면서 한반도를 초국적 자본에 내준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일제식민의 역사와 그 해방의 의미 그리고 해방 이후의 식민 등에 대한 흐름을 잘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해방'(8월 22일 방영)에서는 다소 강도를 높였다. 세계 최장기수였던 김선명씨에 대한 조명을 시작으로 인혁당 사건, 아람회 사건, 방북사건, 걸개그림 사건 그리고 최근의 소설 태백산맥과 신학철 화가의 그림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일련의 사건들을 훑으며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해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간접적으로 연결시

킨 것이다. 비록 주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한국 근대사에서 '이데올로기 노예'의 전형을 보여주는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이날 방영분의 초점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킨 것은 최근 국가보안법 철폐 논의와 더불어 시의적절한 내용이었다는 평가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폐해를 자연스럽게 인식시킨 것이 돋보였다.

그러나 모든 방영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무리였다. 일례로 8월 29일 방영한 '성으로부터의 해방'에서는 '성 해방'의 본질적 의미를 쫓기보다는 시간대별로 여성들의 사회적 입지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나열하는데 치중, 구체적 사례를 통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다소 가볍게 흘렀다는 지적이다. '성해방 = 인간해방'이라는 접근보다는 '여성들의 주권 향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어쨌든 KBS의 [20세기 한국사 해방시리즈]가 세기말 프로그램이 자칫 흐를 수 있는 선정적 방향을 지양하고 지난 100년을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밀레니엄 프로그램들과 함께 우리의 근대사를 재조명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테니까.

### 자기비판의 한계 절실히 드러나는 음부즈맨 프로그램

강경훈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방송모니터분과 회원)

새 정부 출범후 '방송개혁'이라는 화두속에서 방송 3사의 잇따른 개혁 약속과 '프로그램 공익성 강화' 선언이 있었다. 그 가운데 최근 국회의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새 통합방송법에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을 60분으로 편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한 시청자 평가원이 출연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발빠른 조치로 음부즈맨(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확대·강화가 눈에 띄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방송사측이 방송에서 시청자의 주체성을 인식하지 않는 현실은 음부즈맨 프로그램이 진정 수용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얼마나 전달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만들고 있다.

음부즈맨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이랄 수 있는 것은 정작 중요한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질적, 양적 비율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안에는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가 어울릴 수 있지만 특히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잘못을 가려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단순히 이런 저런 평가가 있다고 소개해주는 것은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데 별 의미가 없는 자기비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하철 파업보도의 왜곡 논란과 미스코리아 중계방송 관련 논란이었다. 먼저 지하철 파업보도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왜곡성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 당시에는 아무 소식도 전해주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문화방송(MBC)의 경우 논란이 줄어든 다음인 한 달이 지나서야 자사 방

송국의 보도국이 주최하여 지하철 파업 보도와 관련한 토론회를 주최하였다고 전해주기도 하였다. 물론 그 방송에서도 왜곡성의 비판이 된 내용은 소개해주지 않고 토론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만 전해 주었다. 또한 그 토론회 역시 중간자적 입장에서 있다고 하는 시청자 단체의 대표로 지하철 파업 보도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며 비판한 단체들은 외면했다. 이는 음부즈맨 프로그램이 자기 비판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진다. 음부즈맨의 핵심인 공정성과 관련한 논의를 외면한 것은 음부즈맨 프로그램에 대해 제도적으로 시청자단체의 개입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 미스코리아 대회 중계방송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판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방송시에는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논란을 빚고 있다면서 질적, 양적 비율을 왜곡한 결과를 낳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 특히 문제시되고 있는 사안으로 자사 프로그램의 홍보수단으로 이용에 대한 것도 지적할 수 있다. 공영성 논란이 시들면서 모든 방송사들이 이제 대놓고 시청률 올리기에 급급하다. 음부즈맨의 주요 기능인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른바 잘나가는 프로그램의 선전, 개편 선전 등을 하는데 열중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고정적으로 시청자가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비평하던 코너(KBS의 「방송지킴이」, MBC의 「집중토론」)들을 없애버리거나 전문가가 전담케 해버리는 등 보다 자아성찰적인 목소리를 들

는 데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 방송편의주의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각 방송사의 음부즈맨 프로그램 편성시간에서 그 근본적인 문제점이 다름 아닌 방송사들의 자기비판에 대한 인식부족에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현재 방송 3사는 '시청자 의견을 듣습니다'(KBS1TV / 토, 오후5시15분, 45분방영), 'TV속의 TV'(MBC / 토, 낮12시10분, 40분방영), '열린 TV 시청자 세상'(SBS / 토 오전9시, 50분방영)를 각각 음부즈맨 프로그램으로 방송하고 있다. 보다 자기비판에 대한 혁신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방송사의 인식변화 못지 않게 시청자의 의식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인 주권회복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갑작스런 미디어 매체의 등장과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에 제대로 된 미디어 교육 즉, 의식 있는 시청자로서의 자세가 갖춰질 시간이 부족했다. 매체의 비평과 프로그램을 보는 머리보다는 단순히 쳐다보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시청자, 시청자 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수행해야 한다. 자기 비판적인 음부즈맨프로그램에 '자기 비판'의 역할만 부여하는 것이 아닌 시청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비판의 공간을 요구해내야 하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위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지만 시청자가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의 액세스권의 보장이 시청자가 방송의 주체가 되고, 거대 권력을 행사하는 방송/언론의 비판자 역할을 수행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변화의 요구

<그것이 알고 싶다> '자식의 생명, 부모의 것인가?'  
(SBS 8월 21일 오후 10:50~11:40)

강경훈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방송모니터분과 회원)

시사고발 프로그램들이 흥미위주의 선정적 소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에 그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화면과 내용들이 시청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방향점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8월 21일(토) 방송된 서울방송(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자식의 생명, 부모의 것인가?”>는 부모의 잘못된 믿음으로 고통받은 김신애(9)양의 얘기를 통해서 강제력 없는 선언에 불과한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치료나 생존권에 서 무엇보다도 부모의 친권이 우선시 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부모가 종교와 신앙의 힘만으로 딸의 병(소아암의 일종인 율름 종양)을 고칠 수 있다며 치료를 거부, 종양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며 때만 앙상하게 남아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는 신애가 방송에서 “아빠 미워, 참는 데까지 참았는데 이젠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라고 울부짖으며 부모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안타까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신애 아버지의 (“신앙의 힘을 믿고) 고통받으면서 지내라”는 식의 반응을 보면서 분개했다.

만약 이 날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런 신애의

사연을 소개해주는 데서만 그쳤다면 그 역시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화면을 통해서 ‘현실고발’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 방송은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에 대한 비판 못지 않게 아동의 치료나 생존권에서도 부모의 친권이 우선시 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까지 이어졌다. 이는 곧 여론형성으로



이어져서 방송후 각 PC통신에 올라온 수천 건의 글들은 특별생방송 <신애를 살립니다>를 마련하게 만들었고 빛나간 신앙과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 잘못된 법제도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내었다. 하지만 이날 방송이 제시한 또하나의 문제의식인 ‘빛나간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접근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방송 특히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능이 현실비판을 넘어서 폭대안까지 제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회적 병리현상이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다면 그것까지 고민해서 변화를 요구해내어야 하는 것은 당연

한 것이다. 이 날 <그것이 알고 싶다-“자식의 생명, 부모의 것인가?”>와 그 후 PC통신에 올라온 수천건의 글들이 이끌어내는 여론형성의 힘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 홍세화와 임수경

<수요기획- 망명자 홍세화, 20년만의 귀국> (KBS 9월 1일 밤12:00)  
<MBC 스페셜- 임수경 방북사건> (MBC 9월 3일 밤11:15)

강경훈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방송모니터분과 회원)

우리 사회는 과연 열린 사회인가.

이 사회의 공공매체인 방송은 그를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척도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우리의 방송은 금기시 하는 것이 너무 많았다. 특히 그것이 통일이나 북한, 사상적 논쟁과 관련되어 비판적, 진보적 시각을 비친다면 소재화 자체가 힘들 정도였다. 소재화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진실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그저 권력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우리 방송이 보여주는 한계였던 것이다.

하지만 가끔 변화의 가능성을 느낄만한 구석을 발견한다.

드디어 TV에서 ‘망명자’ 홍세화와 ‘통일의 꽃’ 임수경을 만나게 되었다.

그동안 두 사람에게 ‘남민전 빨갱이’와 ‘북한의 지령에 놀아난 불순 좌경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놓았던 방송이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물론 KBS <수요기획- 망명자 홍세화, 20년만의 귀국>(9월 1일 밤12:00)가 역사적 사건인 ‘남민전 사건’이나 70년대 민주화시대 피해자들의 복권의 정당성을 규명해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홍세화씨가 “최후의 망명객”이란 수식어는 거짓말입니다. 상품화라는 걸 잘 압니다.”라며 소위 ‘시국관련 해외체류자’가 아직도 20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전해주는 것은 아직도 수많은 망명자를 만들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암시해준다.

MBC <MBC 스페셜- 임수경 방북사건>(9월 3일 밤11:15)도 현재 우리 통일운동 세력이나 학생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대해서 비판해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임수경씨의 방북이 남북한 모두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파급효과를 미쳤으며 그동안 정부 독점으로 이뤄지던 통일문제를 민간차원으로 확대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짚어준다. 그 진실의 확인은 방송에서도 임수경에게 ‘통일의 꽃’이라는 호칭을 부여하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다. 권력과 자본에 의해 가려지고 덮여지는 거짓을 원하지 않는다. 거짓으로 채워진 것들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우리는 단지 지나간 시간을 아까워하는 작업만 되풀이할 뿐이다. 가리고 덮어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진실을 규명해낼 수 있다.

방송은 이 사회의 많은 가치를 자유롭게 논하고 평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시청자는 그 속에서 진실을 규명해낼 힘을 가지고 있다.

방송이 홍세화와 임수경의 진실을 말하기까지는 20년과 1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너무나도 소모적인 시간이었다.

20년과 10년후에 우리의 방송이 지금의 현실을 말하면서 ‘그때가 거짓이었다’고 ‘이제 새로운 진실을 밝혀졌노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현실의 진실을 제대로 평가했으면 좋겠다.

### 생명을 담보로 한 KBS의 '밀레니엄' 기획

김성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방송모니터분과 회원)

지난 14일, 방송사상 첫 히말라야 캠프중가봉 동정 생중계를 위해 현지에 파견된 원정대원과 KBS 기자 등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캠프중가봉 동정 생중계는 KBS의 '밀레니엄' 기획이었다. 그러나 비산악인으로 구성된 중계방송단에 이번 생중계는 처음부터 역부족이었으며, 결국 방송장비의 발달로 이제는 우리나라도 히말라야 정상 생중계가 가능해졌다는 단순한 과시욕이 부른 참사가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일반적인 해외 현지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사전 현지답사, 경험 많은 제작진 파견, 사전교육 등의 철저한 대비를 하더라도 종종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적 상황으로 사고가 발생한다. 더군다나 캠프중가봉은 산악인들 사이에 에베레스트보다 더 험하다고 정평이 나있는 곳이다. KBS는 이번 생중계를 위해 위성중계장치(SNG), 초소형 마이크로웨이브 카메라 등 대규모의 물적지원과 함께 원정대원보다도 많은 20여명의 중계방송단을 파견했지만 밤에는 영하15도, 한낮에는 복사열로 인해 영상40도에 육박하는 혹독한 기상조건과 이로 인한 산발적인 눈사태 등으로 전문 산악훈련을 받지않은 중계방송단에게는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KBS는 지난 3일 '여기는 캠프중가 베이스캠프'를 시작으로 1TV [9시 뉴스]와 [6시 내고향],



2TV [뉴스투데이]를 통해 동정 중간과정을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보도해 왔으며 추석연휴기간인 오는 23~24일 정상도전을 종일 생방송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아무리 밀레니엄 기획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종일 생방송도 모자라 뉴스시간을 통해 중간과정을 매일 보도하는 것은 지나친 자사 홍보이자 KBS뉴스의 권위 및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나아가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자사의 이해를 위해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생중계를 통해 KBS가 지난해부터 특집 다큐멘터리를 통해 히말라야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온 SBS와 시청률을 의식한 과도한 '보여주기'경쟁을 하는 것이 아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KBS는 이번 사고를 통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외면한 채, 고귀한 생명을 담보로 시청률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 한국 정치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프로그램

<길종섭의 쟁점토론> '시민단체 국감 방청'  
(KBS 1TV 10월 7일 오후 10:00~11:00)

김성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방송모니터분과 회원)

15대 국회의 마지막이자 16대 총선을 앞둔 올해 국정감사가 시민단체의 방청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감에 나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방위, 건설교통위 등이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국감연대)'의 국감현장 방청을 막은 데 이어 1일 보건복지위는 모니터요원을 강제 퇴장시켰고 현재는 2개가 더 늘어난 6개의 상임위가 국감연대의 방청을 불허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10월 7일 KBS 1TV에서 방영된 <길종섭의 쟁점토론>은 침체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시민단체의 국정감사 방청에 대해 방송사가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자, 변호사, 그리고 국감연대 관계자와 각 정당별 여야 국회의원이 각각 찬반입장을 대표하여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국감 방청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지를 편 여야 국회의원은 논리상의 허점과 수준이하의 발언으로 토론회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민련의 이원범 의원은 '언론사의 보도행위를 시민단체가 대신하려 하나'는 등 쟁점을 언론사와 시민단체간의 대립구도로 호도하여 문제의 본질을 회색시키려 시도하였으며 한나라당의 김찬진 의원은 '방청은 환영하지만 평가는 안된다', '아주 잘하신 분을 뽑아주는 것은 좋지만 잘못했다는 비판은 국회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논리로 일관했다. 이는 결국 국회의 자율권은 구색에 지나지 않으며 실은 의원들이 자신들의 준비소홀이나 밀실민원의 노출을 꺼리고 시민단체의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기 때

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찬성측의 이석연 변호사는 국정감사가 비공개 원칙으로 되어있는 현행 국회법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밝히고 시민단체의 방청권과 의원들의 의정 평가 공표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시민단체와 몇몇 국회의원들 간의 대립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중대한 기본권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태호 국감연대 사무국장은 의원들이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시민단체들과 공개적으로 논의해 조정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런 절차없이 무조건 막고 보자는 발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본 프로그램은 전화 설문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시청자의 95%가 시민단체의 국감 방청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반대측으로 나온 여야 국회의원은 '설문이 잘못됐다', '둘다 합격이다'라는 발언을 하며 전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이날 방영분은 핵심 쟁점사안에 대한 시의 적절한 토론회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한편으로 한국 정치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프로그램이 되고 말았다.

# 방 송 모 니 터 분 과

방송분과는 민언련에서 '극성스런' 분과로 통한다. 분과 회원의 수는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지만 다들 열정으로 뚝뚝 뚫어 일당백의 역할을 당당히 해내고 있다. 그 열정은 방송모니터는 물론이고 언론개혁을 위한 민언련의 어느 행사에서나 방송분과원들은 모여서 힘을 발휘하곤 한다.

지난 1999년은 방송분과가 모니터팀으로 자리를 잡는 한해가 되었다. 기획모니터로 계층별(주부, 대학생, 청소년) 프로그램과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뉴스 프로그램을 모니터하였다.

또한 매달 <이 달의 좋은·나쁜 방송>을 선정하여 좋은 방송에는 힘을 보태고 나쁜 방송에는 채찍질을 가함으로써 보다 나은 방송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청자의 역할을 해내었다. <이 달의 좋은·나쁜 방송>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방송사나 신문사, 타모니터 단체에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분과 회원들은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달의 좋은·나쁜 방송>을 뽑는다. 지난 1월 초 <99년의 좋은·나쁜 방송>을 뽑을 때에는

회원들간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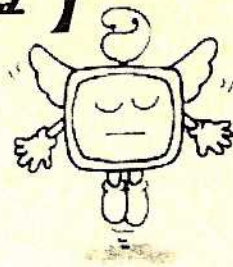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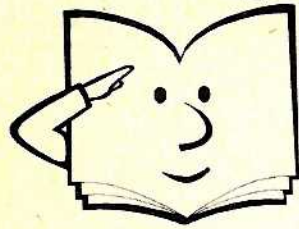
이외에도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올해의 남녀평등 프로그램상> 후보 선정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세기말에 NGP가 무슨 유행처럼 언론의 주목을 받더니 새천년을 맞으면서 총선연대가 시민의 힘을 결집하여 선거라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에서 당당히 그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언련은 총선연대 훨씬 이전에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를 통해 선거보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언론에 채찍질을 해주는 것은 당연 선감연의 책임이다. 선거가 하루 하루 다가오는 요즈음 방송분과는 선감연 KBS팀에서 활동하면서 감시의 눈길을 떼지 못한다.

방송분과 회원 중에는 방송 현업에 종사하는 직업인도 있지만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회원들은 자칫 편협한 시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감시하는 일도 빼놓지 않는다. 방학이 되면 모니터의 한계와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 스터디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한단계 더 나아가는 시민언론운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 많지 않은 회원이지만 이들과 모니터 간사는 오늘도 TV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우리가 '방송'을 서서히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 [ 신문·방송 모니터 학교 ]



사회를 투영하는 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문과 방송.

메스컴을 받아들이는 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비판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고 버릴 것을 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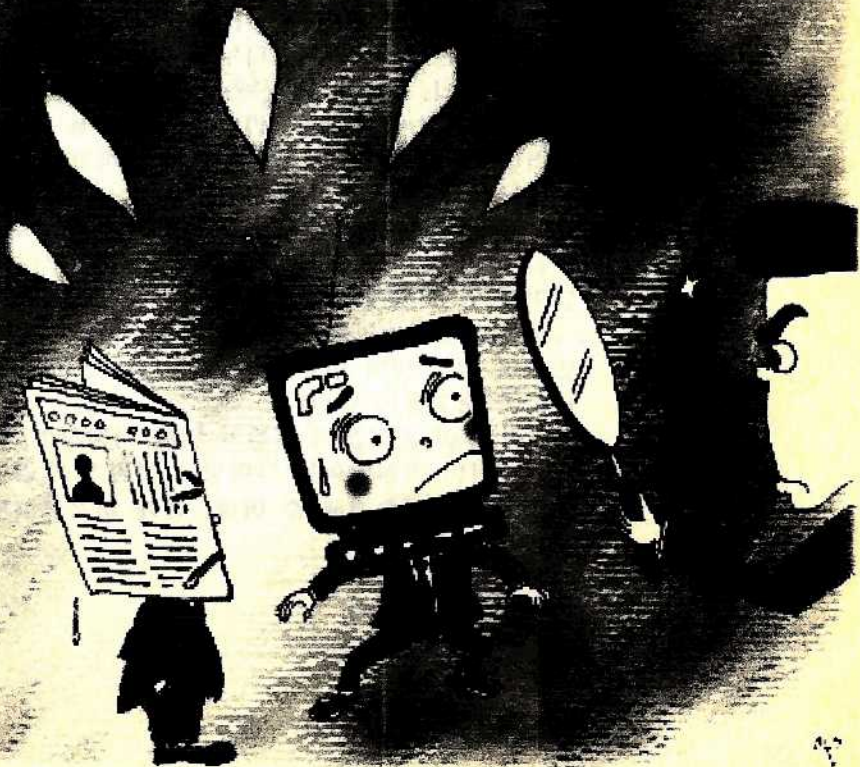
접근하는 자세를 길러주는 강좌입니다.

강사 ●	최민희(대안력 기획감독), / 최영덕(방송전문인 선임연구원), 박용진(방송전문인 선임연구원) / 김중배(미디어오늘 편집국 부장), 김은주(대안력 신문모니터반과장) / 정희중(대안력 미디어포드보부장)
강의내용 ●	/ 매체비평, 왜 하는가 / 영상언어의 이해 / 방송프로그램비평(드라마, 시사·보도, 쇼·오락) / 신문편지의 스토리텔링 / 신문의 왜그보다 / 매체비평시스템

기간 : 주2회 매주 화·목 7-9시,  
총10강

수강료 : 50,000원

# 신문모니터





신문분과장

김은주

매주 화요일. 모니터를 시작하기 전 신문분과에는 가벼운 긴장과 함께 작은 실랑이가 벌어진다. 열심히 신문을 보는 척하거나 탄전을 피워보기도 하지만 대략 6개월에서 1년이 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 모니터한 내용을 정리할 보고서 담당자를 정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대략 자기 순번이 된 걸 '감'잡고 자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몇차례의 회유와 협박 그리고 책임감, 의무감에 호소하는 과정을 거쳐 겨우 결정되곤 한다.

어떤 형식이건간에 쉽게 쓰여지는 글이 없겠지만 모니터 보고서를 쓰는 것은 참 어렵다. 글쓰기를 업으로 하지 않는 아마추어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신문들의 공통적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과정도 쉽지 않은 일이고 신문을 정리한 시트가 제대로 안돼있는 경우도 있어 일일이 신문을 다시 뒤져 봐야할 때도 많다. 게다가 각자 다른 의견을 토론속에서 하나로 모아내는 일은 더욱 만만치 않은 일이다. 내 주관이나, 전체의 통일된 의견을 7개 신문중에 적절한 기사에문을 넣어가며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서술해 나가는 과정은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머리털 쥐어뜯어가며, 한나절 이상을 투자해 썼는데 노력의 산물이 활용이 되는지 어떤지 가타부타 아무 반응이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보면 지치게 된다. 활동의 의미는 찾기 어려운데 공부며 취직, 회사생활과 가정생활까지 병행하게되면 모니터활동에 대한 심각한 회의도 따르게 되고 그러다보면 충실한 보고서를 쓰지 못하거나 토론은 있었는데 보고서는 안나오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 자료집은 그런 신문분과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다. 맘과 고뇌, 어설피품과 거침 그리고 언제 열심히 했고 게으름을 부린 때는 언제인지까지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 소중한 기록이다.

올해에는 깊이있는 기획모니터와 시기적절한 일상모니터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 모니터보고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읽는 분들의 따끔한 충고를 기다린다.

그리고 이 자료집을 만들기 위해 학창시절, 마지막으로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3학년 겨울방학을 털어넣은 기범,영은,경구,혜원과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2년간 수고해 준 이영민에게 마음으로부터 고마움과 박수를 보낸다.



I

# '99 10대 왜곡\* 편파 보도 선정

## '99 10대 왜곡 편파 보도 선정

신문분과 선정

- ▶ 북연간면 보도
- ▶ 지역경제 포장보도
- ▶ 지역별 취업 보도
- ▶ 중앙일보 서해간면 보도
- ▶ 현재까지 조국조각간면 보도
- ▶ 8·15 서민간면 보도
- ▶ 나포의 오그심간면 보도
- ▶ 조계강서 취업오도 서민간면 보도
- ▶ 박경의 기념관 건립 보도
- ▶ 노근리간면 보도



### 북한관련 보도

북 인양성 보도, 서안그린 보도 등

남북화해 무드를 조성하려는 일련의 분위기에 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은 여전히 긴장과 대립을 부추기는 냉전적 보도태도를 보였다. 지적이다.

서해안 교전사태는 남북의 경계선이 얼마나 위태로운 지를 반증하는 동시에 평화와 공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가 시급함을 일깨워 주는 사례였다. 그러나 언론은 대결적 시각으로 접근하며 선정적 보도, 추측·확대보도, 경쟁적 폐거리즘 등으로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냉정하게 사태의 발생원인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언론이 먼저 흥분하여 사실을 확대하고 '웅장'을 선동하며 정부의 햇볕정책을 공격하고 나섰다.

그러나 연일 1면을 장식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던 교전사태가 조작된 것이라거나 전투상황이 현장에 접근하지도 못한 기자들이 쓴 한편의 소설이었다는 사실은 상업적이며 반통일적 보수 언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북 미사일발사 움직임 관련보도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언론은 사실확인보다는 북의 호전성과 위협성을 강조하면서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주장일변도였다. 특히 조선일보는 미사일 문제에 대해 "체네라합의의 틀에 구속될 것이라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틀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7/28일자)이라며 국제적인 합의를 무시하는 주장을 하여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편향된 시각이 두드러져 비판을 받았다.



### 지역감정 조장하는 보도

한나라당 집회 관련 보도 등

지역감정을 망국병이라 비판하면서도 정작 언론 스스로는 지역감정 조장하는 발언이나 집회 등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이를 흥미거리로 혹은 자사 이해와 결부시켜 보도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조선일보는 지역감정 조장보도에 가장 앞장 선 신문으로 꼽힌다.

1월 24일 한나라당의 마산집회를 시발로 불거진 각종 지역감정 집회 및 발언에 대해 조선일보는 야당원들의 지역감정 조장발언과 주장을 그대로 게재하고 있는 반면 여당에 대해서는 '유언비어에 대한 우려'라는 입장을 기사화 하는 가운데 또 다시 유언비어를 반복 기술하였다. 또 부산을 비롯한 영

남지방의 경제악화 원인을 심층분석 없이 결과위주로 보도, 그 신빙성에 의구심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유언비어의 실체나 진위를 가리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부추겨 결국 한나라당의 지역감정 이용에 적극 동조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 지하철 파업 보도

회사가 단체협약을 어기지 않았다는 점 등 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배경은 외면한 채 시민들의 불편을 근거로 지하철 노동자들을 비난했던 사례.

한겨레를 제외한 대부분은 언론은 천편일률적으로 '시민을 불모로 한 불법 파업'으로 '나라경제를



파탄'시키는 주범이니 정부는 '타협 없는 단호한 대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불편과 위협, 노동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사측의 주장만이 지면을 덮고 있을 뿐 파업의 원인이나 노동자들의 요구 등을 보도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기관사 감금이나 고의고장 의혹 등 노조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왜곡보도까지 하는 등 반 노동적 편파 보도의 극치를 이루었다. 이 보도는 균형감각을 상실한 채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시간, 장소를 상관하지 않고 일관되게 비판적인 편협함과 객관성이라는 보도의 '기본'조차 무시하는 언론의 독선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 보도로 비판받았다.

### 중앙일보 사태 관련 보도

중앙일보가 선언한 '독립언론'의 구호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 정부의 언론탄압이라는 공세를 펼치며 언론탄압사례와 굴종사례를 보도했던 중앙일보는 홍사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 지면사유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중앙은 심지어 IPI의 서한을 변조, 언론인의 상식을 의심케하는 오보까지 감행했다.

중앙은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총재를 지지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정부에 대한 언론의 압력사례를 열거하며 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의 특정 후보지지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과거 보도에 대한 사과와 자성없이 홍사장 구속을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

조선, 동아, 한국, 문화, 국민 등의 신문은 양비론에 빠져 초점을 흐리거나 사안의 파장에 비해 기사량이 적어 동업자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반적으로는 홍사장의 탈세에 대해 엄정한 처리를 요구했으나, 정부의 언론간섭에도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양비론에 빠져 사안의 본질을 흐렸다는 지적이다. 대한매일과 한겨레, 경향은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탈세와 정부의 언론간섭에 대해 분명하고 강한 논조로 비판했다. 특히 한겨레 9월 22일자 김근칼럼 <홍석현 사장과 언론자유>는 이번 사태 관련보도가 적은 이유에 대해 "언론끼리 암묵적으로 맺은 카르텔적 현상의 표현", 언론계 전체의 자성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 현대전자 주가조작 관련 보도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은 시장논리를 주장하던 재벌이 바로 그 시장의 질서를 흐트러 놓은 사건이었음에도 언론은 시장질서 문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오히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재벌압박으로 해석, 사태를 왜곡하고 심지어 '몰아치기 수사는 위협하다'는 식의 논리를 펴 재벌 보호에 나서기도 했다. 또 경제적 범법행위로 인한 국민경제의 폐해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재벌과 총수에게 쏠리는 국민들의 관심은 무시되었다.

노사문제, 정리해고 등의 논란이 있을 때마다 신문의 논조는 정치논리보다는 경제논리를 앞세워 재벌의 주장을 옹호한 것과 비교해보면 현대의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자유시장 경제논리의 이중잣대'를 보여준 것으로서 언론이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알 수 있는 사례다. 이 사건을 축소 보도한 문화일보는 현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구호를 무색케 했다.

### 8·15 사면 관련 보도

8·15사면은 양심수들의 일부 사면 속에 권력형 비

리인사를 끼워 내보내는 '비림밥 사면'으로 그 본질적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언론은 준법서약서의 존재문제나 양심수 사면의 의미는 외면한 채 '김현철 사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도했다. 그 보도마저도 법적 부당성 및 사면 남용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보다는 여론을 의식한 소극적 비판 수준에 머물렀다.

김현철 사면이 갖는 법적 형평성이나 사회정의 및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구색 맞추기 식 비판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양심수 사면과 관련한 논의나 의미에 관한 보도는 한겨레와 한국일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이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나토의 유고공습 관련 보도

서방통신에 정보를 의존하고 시각까지도 서방세계에 의존하는 국제보도의 문제를 잘 보여준 사례. 한국신문은 역사적으로 인과응보적 측면을 지니고 있는 발칸반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심층적인 분석보다는 유고공습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서방의 시각에 의존하여 보도하는 경향을 보여 사대주의적 시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권옹호라는 서방의 명분이 지니는 허구적 측면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분석으로 비판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전쟁 상황을 흥미 있는 게임을 보듯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관련 보도

이 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축소 보도되었다. 같은 시기 사회

적 이슈였던 옷로비 보도와 비교해보면 양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에도 파업유도 문건이 발견되었지만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보다는 추측성 보도와 선정적 보도가 난무했다. 무엇보다도 한국일보와 한겨레를 제외한 나머지 신문들이 노동계의 입장은 거의 보도하지 않은 채 특검 수사전개과정, 강희복씨의 구속에 대한 적법성 여부, 재계의 반응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준 것은 한국신문의 반 노동자적 시각을 시각이 드러낸 경우라 할 수 있다.

### 박정희 기념관 관련 보도

이 보도는 박정희 신드롬과 언론의 상업주의가 교묘히 결합, 한국현대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기념관 건립안은 박정희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우리의 현대사를 되짚어 보고 한 인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언론은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하기보다는 무책임한 양비·양시론적 입장을 보이거나 조선일보처럼 박정희를 영웅화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두 가지 모두 문제라는 게 민언련의 지적.

또 언론은 소극적 보도로 논점을 회피하였고 공과를 병렬적으로 배치하거나 계층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언론의 모호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객관적 평가를 통한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기했다.

### 노근리 관련 보도

그동안 미군범죄는 사안의 크기와 국민들에게 준



충격을 감안할 때 '성역'이라 불릴 정도로 축소 무시돼왔다. 그러나 언론은 노근리 '양민학살'에 대해서는 미군범죄로는 이해적이라 할 정도로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근리 '양민학살'보도가 나쁜 보도로 선정된 이유는 'AP통신 보도만을 인정하는 사대주의적 보도태도'와 '한미우호에 가려진 진상규명' 때문이었다.

조선, 동아, 중앙 등은 AP통신의 보도를 '킷 보도'로 추켜 세웠을 뿐 아니라, 심지어 조선일보 10월 1일자 사실 <노근리 한 풀어줘야>와 중앙일보 10월 3일자 분수대 <노근리 사건과 기자정신> 등에서는 한국 언론이 외국 언론보다 먼저 보도하지 못했다며 '자괴하는 마음뿐' '민망스럽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AP를 추앙하고 있다. 그릇된 보도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AP의 보도를 그대로 받아적기만 할 뿐 추가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중앙일간지보다는 지방지들이 자기 지역의 피해사례를 보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한술 더떠 '한미우호'주장은 사람들의 인식에서 50여년간 가매장돼 있던 노근리 피해양민들이 이제 겨우 제대로 안장되려는 순간에 다시 못을 박은 것이나 다름없다. 진상규명과 피해배상을 요구해야 할 언론이 양국이 '혈맹관계'임을 강조하며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는가 하면 "그때 발생하는 적축의 사상자가 반드시 무장군인에 국한되리란 보장이 없다. 지난날 월남파병군의 경우 민간인 살상이 전무하지 않았었다. 그것이 전쟁의 생리다"(중앙일보 10월 12일자 중앙시평 '작은 조각 큰 그림')라는 주장이 미 국방부가 아닌 한국언론에서 나왔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언론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든다. '진실보도를 통해 국가안보'는 있을 수 있으나 '국가안보를 위해 진실왜곡'은 있을 수 없다.



II

'99 이 달의 최고·최악 사설



'99 이 달의 최고·최악 사설

- ▶ 8월 최고-언거며, 보안법 개정과 섹션 공세(8/23)
- ▶ 8월 최악-조선, '보안법'세도론은 여론 뭇갯(8/17)
- ▶ 9월 최고-언거며, 놀라운 언론사조의 맹세(9/18)
- ▶ 9월 최악-중앙, 항아떡속 잠적(9/18)
- ▶ 10월 좋은-언거며, 광개신왕, 단단한 신문(10/7)
- ▶ 10월 나쁜-중앙, '연회록'이 남기고 었다(10/9)
- ▶ 11월 최악-조선, '관첩'이 샅대질하는 공연(11/26)
- ▶ 11월 조선-언거며, 나쁜 고소야(11/29)
- ▶ 12월 최고-중앙, 연고중 섹션마다 포사야(12/10)
- ▶ 12월 최악-중앙, 폭연.폭격이 난무하는 사회(12/15)  
조선, 정답 '사각계 었는' 세상(12/15)  
세계, 폭격서의 조방음(12/13)
- ▶ 12월 조선-언거며, '반세계' 죄의 뱀(12/2)

8월의 최고 사설, 최악 사설  
일간지 사설 및 내부필자 칼럼

최악-조선일보 ['保安法' 서두르는 이유 뭘가](8/17일자)  
최고-한겨레 신문 [보안법 개정과 색깔론 공세](8월 23일자)

극단적 표현과 논리적 비약에 의존한 조선일보 사설, 설득력 없어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개정 방침을 천명했다.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를 양산하며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국가보안법은 유엔인권위를 비롯하여 국내외 학계, 법조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정·요구해왔던 법안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법안 개정에 이제 정부가 나선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정 방침이 천명된 이후 한나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언론에서는 조선일보가 전면 비판에 나섰다. 그대표적 사설이 바로 ['保安法' 서두르는 이유 뭘가]이다. 한편 그 동안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논쟁과정에서 이른바 '색깔론'을 명분 삼아 안보상업주의를 조장하며 여론몰이를 해왔던 대부분의 언론이 이번 보도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에 부분 긍정하는 등 변화를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사설의 최악사설 - 조선일보 ['保安法' 서두르는 이유 뭘가](8/17일자)

이 사설은 "국가 최고통치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개정이나 폐지를 언급할 정도로 국가보안법이 지금 그 어떤 큰 '발전의 걸림돌' 노릇을 하거나 악역을 하고 있다는 것일까"라는 의문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고, 모호한 법 적용으로 인한 폐해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다. 형벌의 규정은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적용의 개념이 자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지금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각종 간첩단 사건, 프락치 사건들과 정치적인 반대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 국보법을 악용하여 구속하는 일도 있어온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조선일보의 '의문'은 자의적인 법 적용을 통해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침해하며 민주화에 역행해오던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를 축소,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어 이 사설에서는 김대통령의 개정방침 천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여당이 보안법 문제보다 더 급한 국사가 산적해 있는데도 그보다 보안법이 마치 가장 위급한 병폐인양 취급하는 처사를 도저히 이

해할 수 없다"는 게 그렇다.

이 사설에서 '가장 위급한 병폐', '도저히' 등 다소 극단적인 표현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 조선일보가 말하는 '가장 위급한 병폐'나 '더 급한 국사'가 무엇인지도 분명치 않다. 무엇보다도 사회 각 분야에 산적한 '국사'를 수평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모든 사안이 다 그 나름대로 산적한 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개혁과 재벌개혁 모두 급한 사안이며 각각의 영역에서 모두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어느 한쪽이 더 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그 동안의 폐해를 생각하면 국가보안법의 개폐정어야말로 어느 '국사'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일보의 시각은 현실인식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점도 있다는 분석이다.

현실인식의 부족은 이 사설 전반을 지배하는 가장 커다란 허점이다. "최근 들어 각급 수사기관과 각급 법원도 보안법 남용을 막기 위해 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는 데도 그런 '운영의 묘'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개정이나 일부 조항 삭제만이 능사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이 현실인식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국가보안법이 운용의 묘로 해결될 것이었으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해방후 반세기 동안 '레드 콤플렉스'로 불리는 반공 이데올로기는 우리 사회의 불문율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를 악용해서 올바른 가치판단을 흐리게 하며 정권의 통치수단으로서 국가보안법은 존재해왔다. 따라서 '운영의 묘', '쥐를 잡으려다 독을 쉰 수 있다'고 운운하는 것은 그동안의 폐해를 외면한 채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 주장은 객관적 현실자체를 외면하고 있기도 하다. 수사기관이 보안법 남용을 막기 위해 '운영의 묘'를 발휘하고 있다는 얘긴데, 이를 현실에 적용시켜보면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 더욱 남용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한겨레가 8월 23일자 사설 [보안법 개정과 색깔론 공세]에서 지적한대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당국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보안법 구속자의 수는 1년 동안 413명(민가협 집계)으로 전 정권보다 오히려 3배 가량 늘어"났고 이는 국보법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설 후반부에서는 극단적 상황설정으로 인한 논리적 비약이 반복되었다.

"이런 핵심적인 조항(10조 불고지

'保安法' 서두르는 이유 뭘가

국가 최고통치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개정이나 폐지를 언급할 정도로 국가보안법이 지금 그 어떤 큰 '발전의 걸림돌' 노릇을 하거나 악역을 하고 있다는 것일까? 라는 의문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고, 모호한 법 적용으로 인한 폐해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다. 형벌의 규정은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적용의 개념이 자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지금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각종 간첩단 사건, 프락치 사건들과 정치적인 반대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 국보법을 악용하여 구속하는 일도 있어온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조선일보의 '의문'은 자의적인 법 적용을 통해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침해하며 민주화에 역행해오던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를 축소,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만 불고지(10조) 폐지뿐 아니라 반국가단체 잔인-고무(7조) 개념도 재정의 법 적용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폐지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또 외환공신죄(8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북한에 대해 이로운 행위'를 처벌토록 한 2조도 남북교류협력법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수정을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이런 핵심적인 조항들이 삭제되거나 현세해지면 예컨대 인공기를 걸어놓고 시명운동을 벌여도 처벌할 수 없으며, 없는 사실을 꾸며서 김정일이 대단히 인품인양 찬양해도 처벌대상이 안된다. 또 외환공신죄가 없어지면 북의 단체와 남의 친북단체가 '신식민주의 체제 타도'를 주장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해도 죄가 되지 않으며, 남북 그룹과 북측 그룹이 패스를 통해 공동부쟁을 모의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많은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우리는 김 대통령이 인권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서 평가하지만, 그렇다고 보안법을 실효성 없게 자칫 친북활동의 공간을 넓혀주면 나라가 결단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



죄, 7조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8조 회합통신죄 등)들이 삭제되거나 허술해지면 예컨대 인공기를 걸어놓고 서명운동을 벌여도 처벌할 수 없으며, 없는 사실을 꾸며서 김정일이 대단한 인물인양 찬양해도 처벌대상이 안된다"는 부분을 보자.

'인공기를 걸어놓고 서명운동을 벌인다'거나 '없는 사실을 꾸며서 김정일을 찬양한다'는 가정은 누가봐도 극단적인 가정이 아닐 수 없다. 또 독소조항 개정이나 국보법의 폐지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형성을 무시한 것이며 더 나아가 반공이데올로기를 자극해 객관적 가치판단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논리전개가 아닐 수 없다.

또 "회합통신죄가 없어지면 북의 단체와 남의 친북단체가 '신 식민주의 체제 타도'를 주장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해도 죄가 되지 않으며, 남쪽 그룹과 북쪽 그룹이 팩스를 통해 공동투쟁을 모의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많은 법조인들의 의견이다"라는 부분 역시 극단적 논리전개다. 조선일보는 '법조인'이라는 전문가 집단과 '많은'이라는 표현으로 주장에 신빙성을 확보하려는 것이겠지만 결국 '막연한 다수'에 의존하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 사실은 "보안법을 선불리 건드려 자칫 친북활동의 공간을 넓혀주면 나라가 결판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맺었다. '선불리'라는 표현으로 해명할 여지를 만들어 놓긴 했다. 즉 '선불리 건드리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표현의 묘'일뿐 이 사실이 정작 말하고 싶었던 말은 '보안법 유지'와 '반북이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선불리 건드려 친북활동의 공간을 넓혀준다'는 부분도 그렇지만 이를 바로 '나라가 결판난다'는 극단적 상황으로 내모는 논리전개에서 조선일보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개정문제가 친북활동의 구실을 위한 것이 아님은 상식적인 얘기이다. 색깔론 제기의 당사자인 한나라당 역시 국보법의 독소조항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조선일보 역시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이미 오용이나 남용의 소지가 있는 보안법 일부 조항을 인권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다듬어야 할 필요성 자체만은 여러 차례 제기했다"며 동의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나라가 결판날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색깔론 공세'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현재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부터 최근 벌어진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까지 모두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인도적 차원의 비료지원에서 예술, 문화, 체육부문등 남북의 교류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민간교류와 남북 경협사업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조선일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최고사설 - 한겨레 신문 [보안법 개정과 색깔론 공세](8월 23일자)

조선일보 사실이 근거가 부족하고 극단적 상황에 의존하고 있다면 한겨레 사설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화와 협력을 강조, 평화통일 지향적 시각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 사설은 우선 일부에서 제기하는 색깔론 공세를 전면 비판하며 "보안법 개폐를 주장해온 유엔인권위원회나 국제사면위원회 등의 인권단체들에게도 색깔 공세를 펼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 그리고 색깔론 공세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서독과 대만의 실례를 통해 설명해주고 있다. 즉 "서독은 아예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지도 않았고 대만도 지난 91년 이를 폐지한 터"라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와 주장들은 매우 실질적이다.

이어 한겨레는 색깔론의 핵심주장을 세가지로 요약하고 이에 반박했다. '국보법 개정이 시의적절하지 않다', '북한 형법문제와 연계 등 상호주의적용', '법적용을 엄격히 하면 된다'는 게 색깔론의 주장이라는 것. 그러나 한겨레는 "이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남북관계는 그나마 이루어지던 교류, 협력 사업은 모두 중단된 채 소모적인 적대적 대결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단기적으로 볼 때, 북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상호주의라는 것도 남북간의 갈등만을 일으켜 온 냉전 지향적 접근 방식이었기 때문이다"라고 것이다. 남북의 대결 구도를 대화와 협력의 구도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또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적용과 운영을 엄격하게 한다지만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당국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보안법 구속자의 수는 1년 동안 413명(민가협 집계)으로 전 정권보다 오히려 3배가량 늘어났다"고 실례를 제시했다.

이어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과거 보안법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장과, 활동 나아가서는 민주,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데 주로 악용됐다는 점이다"라며 역사적으로 국보법이 어떻게 악용되어왔는지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근본적 문제는 "학문과 예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을 개폐함으로써 참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야말로 오히려 국가의 안보와 발전, 평화, 통일의 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사실의 결말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의 근거와 의의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금강산 여행이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국가보안법상 반 국가 단체인 북한을 다녀오는 것은 명백한 국보법 위반이다. 하지만 이런 처벌을 받는 관광객은 아무도 없다. 이는 국가보안법 스스로가 모순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이상은 냉전적 논리를 통해 이성적 판단을 저해하며 국민들에 대한 여론몰이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보수언론들의 반 통일적 보도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보안법 개정과 색깔론 공세

국가보안법의 개정 움직임이 '색깔론 공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재발거역과 국가보안법 개정 방침을 두고 한나라당쪽에서는 '외경화' '사회주의적 발상' 등을 거론하며 이념 논쟁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개정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체제를 전면 부정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목소리까지 터져나오며 '색깔론 공세'의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것 같지가 않다. 보안법 개폐를 주장해온 유엔인권위원회나 국제사면위원회 등의 인권단체들에게도 색깔 공세를 펼 것인가? 서독은 아예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지도 않았고 대만도 지난 91년 이를 폐지한 터이다. 다른 나라들은 새 천년을 앞두고 대전략과 구상을 가다듬고 있는 판에 지난 50여 년 동안 되풀이해 온 시대착오적 색깔 논쟁이나 벌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가? 보안법의 개폐에 반대하는 색깔론을 요약해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다. 우선, 시의 적절하지 않다. 남북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상호주의라는 것도 남북간의 갈등만을 일으켜 온 냉전지향적 접근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 적용과 운영을 엄격하게 한다지만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당국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보안법 구속자의 수는 1년 동안 413명(민가협 집계)으로 전 정권보다 오히려 3배 가량 늘어났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겠는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과거 보안법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장과 활동, 나아가서는 민주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데 주로 악용됐다는 점이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보안법의 구속자 대부분이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학문과 예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을 개폐함으로써 참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야말로 오히려 국가의 안보와 발전, 평화, 통일의 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고최악

9월

9월의 최고 사실, 최악 사실

일간지 사실 및 내부필자 칼럼

최고-한겨레신문 <놀라운 언론사주의 탈세>[9월 18일]

최악-중앙일보 권영빈 칼럼 <항아리속 참깨>[9월 18일]



최고 사실 - 한겨레신문 9월18일자 <놀라운 언론사주의 탈세>  
- 사유화된 '독집언론', 중앙일보에 일침 -

지난 9월17일 국세청이 보광그룹 대주주인 홍석현 중앙일보사장을 탈세 혐의로 고발 조치하면서 사회적 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홍 사장 개인의 구속여부를 떠나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성역의 하나 로 여겨졌던 거대 언론사주의 비리가 공개적으로 발표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한 충격을 감안해서인지 지난 6월말 보광그룹 세무조사 착수 당시만 해도 굳게 입을 다물었던 언론 들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다. 그러나 사실을 통해 구체적 입장을 밝힌 신문은 한겨레, 한국, 경향, 대한매일 등에 불과했다. 그나마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정치적 의도 개입 여부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회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18일자 사실 <놀라운 언론사주의 탈세>에서 거액 탈세 혐의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신문사의 사유화 문제까지 지적했다. 민언련 신문모니터분과는 이 사 설의 '이달의 최고사실'로 선정했다.

한겨레신문은 6월말 홍석현 사장의 탈세 의혹이 제기된 이후 "언론사주라 하여 범집행에서 성역이 될 수 는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이번 사실에서도 한겨레는 "국세청이 지난 6월말 보광그룹등에 대 한 세무조사를 발표했을 당시 <중앙일보>는 한나라당의 입을 빌려 정치 보복이라거나 '언론 길들이기' 라 며 연일 정부를 공격했다"며 언론길들이기 논리를 비판했다. 더 나아가 "이 신문은 정부 실정에 대해 비판 적 논지를 견지해왔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까지 몰고가려 했다. 그러나 국세청 발표대 로라면, 중앙일보쪽 주장은 근거없는 부당한 항변임이 드러난 셈이다. 국세청은 당시 명백한 음성탈루 혐의 를 잡았기 때문에 보광그룹을 조사한 것이지, 신문사를 조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며 이번 세 무조사에 대해 '전사적' 대응방침을 천명해온 중앙일보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마무리 부분에서는 "홍사장의 탈법이 신문사의 거둬나기에 흠집을 주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홍사 장을 매개로 보광그룹과 신문사가 소유구조 면에서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재벌의 신

문사 소유를 깊이 따져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며 언론의 사유화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는 한편 언론사 소유구조 개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이번 사건이 보광그룹보다 중앙 일보 사주에 대한 개입으로 비취짐으로써 자칫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인양 왜곡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탈세혐의가 분명하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아무 리 사적 소유를 하고 있더라도 공정성을 생명으 로 해야 할 언론사의 사주가 부도덕한 행태를 보 였을때 그 소유문제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다.



최악 사실 - 중앙일보 권영빈 칼럼  
[항아리속 참깨] - 성격다른 사산 찌집 기, 필명시 부끄럽다 -

지난 4월 금감위에 의해 적발, 5개월여동안 검 찰이 수사해왔던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이 지난 9월 21일 검찰 발표로 매듭지어진 분위기다. 비록 현대그 룰 차원에서 빚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검찰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IMF 전후 시시각각 터진 재벌비 리의 일면을 장식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언론은 정치논리를 개입시켜 본질을 흐리고 사건의 핵심인물이 었던 이익치 회장에 대한 비판에도 인색했다. 중앙일보 9월 10일자 권영빈 칼럼은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린 대표적 기사다. 민언련 신문모니터분과는 이 칼럼을 이달의 '최악 사실'로 선정하였다.

이 사실은 교묘한 논리전개로 얼핏보면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여론호도에 <항아리 속 참깨>라는 은유적 제목도 한 몫 한다. 여기에 범죄자 이익치 회장을 직·간접적으로 미화하는 태도마저 드 러내 많은 지탄을 받았다.

이 칼럼은 우선 독일계 한국인 이한우씨의 글을 인용, "한국인의 '남의 뒷다리 잡기' 풍조"를 설명하고 있 다. "한 사람이 튀기 시작하면 금방 밑에서 끌어내리는 악습이 우리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 요인"이라 는 게 바로 그 내용이다. 물론 이 주장 자체는 한국인의 악습을 되돌아 보게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측면 에서 보면 긍정적이다. 문제는 이 '악습'이 이익치 회장에게 가해지는 검찰수사나 언론보도, 사회적 비난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간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앞서 언급한대로 언론은 이익치 회 장에 대해 '뒷다리 잡기 악습'을 보여주는커녕 축소보도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민언련 신문 모니터분과, '현대전자 주가조작 관련 보도 모니터보고서' 참조)

이 칼럼은 청문회 증인으로 나왔던 앙드레김, 격려금 파문으로 물러난 손숙 전 환경부 장관 등의 사례를

사설

놀라운 언론사주의 탈세

보광그룹의 3개 계열사와 이 그룹의 최 대주주인 홍석현 중앙일보사 사장 일가가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세금 추징과 함께 홍 사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세청 발표로 드러난 보광과 홍 사장의 탈루세액이 엄청 나고, 수법 또한 가법지 않다는 점에서 대 우 충격적이다. 국세청이 거대 신문사 사주 를 이래저로 고발한 것에서도 이번 사인 이 비상치 않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국세청이 지난 6월말 보광그룹 등에 대 한 세무조사를 발표했을 당시 <중앙일보> 는 한나라당의 입을 빌려 정치 보복이라거나 '언론 길들이기'라며 연일 정부를 공격 했다. 심지어 이 신문은 정부 실정에 대해 비판 적 논지를 견지해왔기 때문에 세무조 사를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까지 몰고가려 했다. 그러나 국세청 발표대로라면, 중앙일 보쪽 주장은 근거없는 부당한 항변임이 드 러난 셈이다. 국세청은 당시 명백한 음성탈 루 혐의를 잡았기 때문에 보광그룹을 조사 하는 것이지, 신문사를 조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당시 우리는 중앙일보 사의 삼성 계열 분리와 관련해 삼성측의 불 법 지원 혐의를 지적하면서 조세징의를 세 우는 차원에서 성역없는 세무조사를 당부 한 바 있다. 국세청의 설명처럼 보광과 홍 사장의 탈 세액이 885억원에 중앙일보사와 직결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일단 정리되었다. 신문 사 관련 부분이 실제 없었는지, 아니면 정 치적 시비를 피하기 위해 보광만을 조사했 는지는 알 수 없다. 설사 신문사 계열분리의 관련된 탈세 혐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신문사 사주가 은갖 편 법과 탈법을 동원해 그 많은 금액을 탈세했 다는 점은 믿어지지 않는다. 그는 보광 계열 사 주식을 매각 취득하면서 계열서를 이중 으로 또는 가짜로 작성해 거액의 세금을 내 지 않았고, 임직원과 그 가족 등의 이름으로 무려 1071개의 차명계좌를 전담 직원까지 두고 관리했다는 것이다. 고발을 받은 검찰 은 사인의 중대함에 비추어 공공유용 혐의 를 포함한 모든 혐의점을 일경하게 조사하 는 등 법정형의 형평성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강조하건대 언론사주라 하 여 법정형에서 성역이 될 수는 없다. 중앙일보는 지난 3월 삼성과 계열 분 리하면서 재벌에서 독립된 새 모습을 보이 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조사 결과가 그런 선언을 무색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홍 사 장의 탈법이 신문사의 거둬나기에 흠집을 주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홍 사장을 매개로 보광그룹과 신문사가 소유구조 면 에서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재벌의 신문사 소유를 깊이 따져보 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고최악

10월의 최고 사실, 최악 사실

일간지 사실 및 내부필자 칼럼

좋은 한겨레 [손석춘의 여론읽기] <강패신문, 만만한 신문>[10월7일]

나쁜 중앙일보 사실<'전화폭력'이 넘치고 있다>[10월9일]



좋은 사실 - 한겨레 10월7일자 [손석춘의 여론읽기] <강패신문, 만만한 신문>

추악한 언론과 언론인의 이야기가 그칠 줄을 모른다. 기업이나 개인의 탈세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태연히 거액의 탈세를 저지르는 언론사주와 그 사주의 불법행위를 '관행'이라고 항변하며 출두하는 사장을 위해 한줄로 서서 '힘내시라' 외치는 기자들. 권력에 대한 감시를 제1로 생각해야 할 기자들이 정치인과 밀착되어 보고서를 제출하는가하면 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프락치' 노릇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언론의 현주소이다. 자본의 지배력을 날로 키우면서 끊임없이 권력만들기를 시도하고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는 사주들과 그런 사주의 절대적 영향력아래에서 기자들이 권력과의 결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어찌하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언론은 너나할 것 없이 자성과 참회의 말을 늘어놓으며 언론윤리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신문들은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없어 '의례적 반성'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쏟아지는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가 아니냐는 의혹은 그간 있었던 일련의 사례에서 기인한다. 96년 신문전쟁이후 약속했던 공정한 판매질서를 위한 규약들, 촌지수수거부 등 언론인 윤리강령들이 휴지조각처럼 버려진 사실들을 보면 언론의 반성이 얼마나 공허한 울림인지를 반증한다. 아울러 현정부가 이야기하는 자율적 개혁역시 한계가 분명함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민연련 신문분과는 후안무치한 언론의 행태를 지적하고 올바른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10월 7일자 한겨레 신문 <손석춘의 여론읽기 - 강패신문, 만만한 신문>을 이달의 좋은 사실로 뽑았다. 9월에 좋은 사실로 선정된 주제인 '중앙일보사태'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이 다소 문제로 제기되기는 했지만 타사가 의면하고 있는 언론개혁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이 글은 언론사 비리가 비단 중앙일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을 밝히면서 "관행"이란 말이 나돌만큼 만연된 언론부패는 특정신문 특정인의 구속만으로는 맑아지지 않는다.부패의 독버섯이 자라나는 언론사의 밑질 경영에도 민주화의 빛은 절박하다"면서 그 대안으로 "편집국 민주주의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할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통해 '남의 뒷다리 잡기' 악습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 악습을 한 사람을 매도하거나 '몰어뜯는' 언론의 냄비근성, 하이애나 속성으로 연결지어 비판하였다.

그러나 앙드레 김에 대한 보도와 손숙 장관 관련 보도는 엄밀히 말해 문제의 성격이 달랐다. 손숙 장관의 경우, 남성 언론인들의 권위주의적 시각이 여배우 출신 여성장관에 대한 비하로 표현된 것이고 이에 따라 '냄비근성'도 보여주었던 사례다. 이 칼럼 역시 이점에 대해서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참지 못한 남성 언론인들이 이룩한 참계 근성의 공적 아닌가"라며 비판을 가했다.

게다가 손숙 장관의 경우는 중앙일보가 '특종처럼' 보도한 사안이었다. 손숙 장관이 격려금을 받았다는 내용은 조선일보가 5월 31일자 기자수첩에서 먼저 언급했지만 조선일보는 이를 크게 문제삼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손숙 장관에 대한 냄비성 보도는 중앙일보가 시작한 셈이다. 만일 손숙장관에 대한 언론의 태도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중앙일보는 자신들의 보도부터 반성하는 게 순서다.

앙드레김과 관련한 언론보도는 단순히 냄비언론의 문제로 귀결할 수 없다. 그보다는 오히려 흥미성 위주의 선정적 보도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 높다. 앙드레김의 본명이 밝혀지면서 세간에 얘기거리가 되었던 것은 역시 디자이너로서 화려한 외모와 외상, 그리고 그의 여성스러움 등 그의 특성과 '김봉남'이라는 투박한 이름의 부조화가 빚어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언론은 딱딱한 청문회 쟁점보다 이러한 흥미거리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권 논설위원의 지적대로 앙드레김의 대한 언론보도가 "성공한 사람의 뒷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짓같은 쾌감"이었을지는 의문이다. 더군다나 "고생 끝에 성공한 사람을 짓밟는 사회풍토", "집단 새디즘의 광기라는 지적" 운운하는 것은 매우 지나친 비약이 아닐 수 없다.

권영빈 칼럼

항아리 속 참계



항아리 속 참계. "구로동 출신 김봉남"이 뒷다리 잡기 악습의 주인공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뒷다리 잡기를 즐겼다고 한다. 앙드레 김의 특이한 외모와 여성스러운 외모가 뒷다리를 잡는 악습을 자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은 딱딱한 청문회 쟁점보다 이러한 흥미거리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권 논설위원의 지적대로 앙드레김의 대한 언론보도가 "성공한 사람의 뒷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짓같은 쾌감"이었을지는 의문이다. 더군다나 "고생 끝에 성공한 사람을 짓밟는 사회풍토", "집단 새디즘의 광기라는 지적" 운운하는 것은 매우 지나친 비약이 아닐 수 없다.





이른 사실 - <전화폭력>이 넘치고 있다(16/9일자)

이 사실은 제목에서 드러난대로 '전화폭력'에 대한 따끔한 질책을 담은 글처럼 보인다. 전화도 '폭력의 중요 수단'이 될 수 있다든가 "토론문화를 질식시키면서 개인을 위협과 협박의 공포로 몰아가는 집단 괴롭히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일면 타당하다. 더 나아가 "문명의 이기가 흉기로 둔갑"할 수 있다는 주장은 문명사회에 대한 예리한 비판시각이 엿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러한 타당한 일면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가 전화폭력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다분히 자사 이기주의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로 이 사실 후반부에서도 밝혔듯이 최근 홍석현 사장 구속을 전후로 중앙일보가 보여준 일련의 보도행태에 대한 비판적 여론, 그 중에서도 항의성 전화를 두고 중앙일보는 '전화폭력'으로 매도한 것이다. 더 나아가 "상대를 괴롭히고 보복하려는 일종의 병리적 현상", "심각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은 그야말로 '언어폭력' '문자 폭력'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일보가 언론의 정도를 걷기보다 철저히 사주의 이해관계에 동원되는 비이성적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항의전화 집중으로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다. 바로 중앙일보가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여론에 대해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기는커녕 '집단괴롭힘', '흉기'운운한 것은 이 신문이 과연 누구의 이해에 복무하는 신문인지 여실히 반증해 주고 있다.

또한 이 사실은 성격이 다른 사안과 중앙일보에 대한 항의성 전화를 수평 비교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에 타당성을 부여하지만 다수여론을 매도, 비하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관련 소송사건을 맡은 한 부장판사의 예로서 집으로 꽃바구니를 보내고 '축 사망'이라는 카드를 끼워넣었다든가, 자기편에 불리한 논설이나 기사가 나갔다고 해서 이를 매도하고 욕설하는 사례 등을 중앙일보에 대한 항의전화와 수평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중앙일보에 대한 비판여론은 결코 자기편에 불리한 기사에 대한 항의가 아니다. 중앙일보가 이 정도로 여론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그도 모자라 "경찰은 엉뚱한 곳에 감청을 할 것이 아니다. ... 바로 이런 곳에 감청을 해 비겁한 집단의 폭력을 뿌리뽑아야..."라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사 이해관계 때문에 빚어진 일련의 사태를 두고 감청을 부추긴 것은 언론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인권과 사생활 침해를 공공연하게 부추기는 이 사실은 최악사설로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결론이다.

사설

'전화폭력'이 넘치고 있다

정보화시대에 있어 전화란 대화의 성본의 소통을 가장 손쉽게 처리하는 생활수단이다. 이 전화가 최근 들어 폭력의 중요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화부대'의 등장과 '전화폭력'이 바로 그것이다. 벌써 꽤 오래 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전화부대의 등장은 이 사회의 토론문화를 질식시키면서 개인을 위협과 협박의 공포 속으로 몰아가는 집단괴롭힘의 또다른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 문명의 이기(利器)가 흉기로 둔갑하고 있다. 여기서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것일까. 우리 사회 일각에 도사린 비겁함과 폐거리 이익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전화란 본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익명성(匿名性)이 보장된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집단과 협박을 가하는 비겁한 숨은 목소리가 가능하다. 나는 상대를 모르는데 상대는 나를 속속들이 알고 일방적 폭언을 가할 때 나는 개인적 공포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것도 개인 단위의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성과 집단성을 띠는 것이 전화부대의 속성이다.

비슷한 전화폭력은 도처에 넘치고 있다. 중앙일보가 권정권의 언론탄압 사태를 작나리장계 폭로하자 이를 비난하는 전화부대가 한꺼번에 몰려들어 신문제작마저 어려울 사태로까지 몰고 갔다. 이후의 말을 들을 겨를도 없이 자신들의 말만 내리고 목숨을 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다. 자기편에 불리한 논설이나 기사가 나갔다고 해서 이를 매도하고 욕설하는 사례는 언론사마다 쉬는 일삼기가 되고 있다. 전화폭력으로 본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작고도 이런 병리적 현상에 대해서는 심각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과 관련된 소송사건에서 권정권을 받았던 한 부장판사의 집의 협박전화다. 매일 밤 신문을 읽지 않은 전화를 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어딘지를 안다고 밝히고는 끊는다는 것이다. 집으로 꽃바구니를 보내고 '축사

다. 경찰은 엉뚱한 곳에 감청을 할 것이 아니다. 피해당사자가 신고를 하면 바로 이런 곳에 감청을 해 비겁한 집단의 폭력을 뿌리 뽑아야 유사한 전화폭력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손여분의 여론인기



검은 리무진이었다. 미끄러지듯 대검청사 마당으로 들어선 송승자에서 얽은 미소를 지으며 당당하게 세공포탈 혐의자가 내렸다. 그 순간 대기하던 기자들이 외쳤다. "사장님 힘내세요!" 박수가 터졌다. 습두하는 중앙일보사 홍석현 사장을 위해 한줄로 늘어선 기자들의 사진을 보고 평생 언론학을 가르쳐온 한 원로 교수는 목이 잠긴 소리로 물었다. "그 사람들 정말 신문기자를 맞아요?"

모르는 바 아니다. 어찌됐든 조직의 우두머리 아닌가. '경외대 안 오작'을 '죽이겠다'며 살기둥뚫던(중앙일보) 기자총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기자가 마치 대단한 직업인 양 내세를 생각한 건 허 없다. 하지만 적어도 기자의 생명은 진실에 있다. 그 신문의 대표적 칼럼은 홍 사장 구속사건을 유신시대 '동아시대'에 비유했다. 더구나 "지난 5년간 신문개혁을 내용과 형식면에서 가장 강력히 단행한 신문이 중앙일보"란다. 96년 신문계를 발각 뒤집어놓은 '신문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묻고 싶진 않다. 다만 분명히 짚어야 할 대목은 있다. 탈세 혐의로 구속된 사주를 어떻게 독재권과 사주의 공모로 훔쳐간 민주 언론인들과 견줄 수 있는가. '동아부위'에 대한 모독이다.

문제는 중앙일보 기자들의 항변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기자총회에서 쏟아진 말들 가운데 몇몇 목소리는 경청할 만하다. "강패신문은 따로 있는데 왜 우리가 만만한가!" "지난 대선에서 어느 신문처럼 역겹게 보도하지도 않았는데 총선을 앞두고 만만한 우리에게 싸움을 건 것이다."

강패신문, 만만한 신문

에서 '강패신문' 또는 '역겹게 보도한 어느 신문'이 어디인가는 논점이 아니다. 그래서 강패신문을 달가워했느냐는 물음도 접어두자. 문제의 핵심은 과연 중앙일보 기자들의 의혹이 전혀 근거없는 것일까에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분명 만만하지 않을 법한 신문권력은 오늘 이 순간까지 건재하지 않은가. (중앙일보) 주필의 당부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그랬다. 더 구린 신문을 두고 왜 우리가 항변이 동아일보사 사장실에서 울러나왔다. 신문개혁이 접근할 때 원칙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강패신문이든 만만한 신문이든 마찬가지다. '광탈'이란 말이 나올 만큼 '만만한 언론부대'는 '매일신문' 특검인의 구속만으로는 꺾이지 않는다. 부패의 독버섯이 자라나는 언론사의 필실경영에도 민주회의 빛은 쫓박하다. 편집국 민주주의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할 정기간행물법 개정이 그것이다.

그래서였다. 지난 6월말 보광그룹 세무조사가 시작됐을 때 모든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를 '성급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실감각'이 뛰어난 이들로 인해 김대중 정권은 요즘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언론탄압의 구실수에 휘말렸다. 자본금 100억원이 넘는 법인은 5년마다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언론사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특혜 아닌가. 특혜를 없애고 원칙을 지키라는 제안이 비현실적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인가.

탈세를 해놓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 지면을 '거래'하는 언론권력의 모습은 '자율 개혁론'이 얼마나 현실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언론 집권자가 의도가 정념 단 한 점도 없다면 김대중 정권이 '결별'을 보여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신문권력과 치졸한 말싸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유일 야당' 또한 언론자유와 수호자인 양 부산을 열며 수고할 필요가 없다. 이미 국민들은 참된 언론자유를 보장할 정간행물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해놓았다. 자신들의 외면 끝에 쪼여져 있지만

중앙일보사태를 계기로 기자회견에서 전국기자 25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홍사장구속에 대한 중앙일보사의 대응이 지나치고 그 원인은 사주중심의 언론사 소유구조때문이라는 답변이 80%가 넘는 것을 볼 수 있다. '밤의 대통령'들의 전횡을 막기위해서 사주의 소유를 제한하고 편집권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위한 정기간행물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동아일보가 전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제기했을 뿐 타 언론사들이 정간행물법 개정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겨레는 그동안 꾸준히 정간행물법 개정을 주장해왔으며 바로 이 칼럼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글은 "탈세를 해놓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 지면을 '거래'하는 언론권력의 모습은 '자율 개혁론'이 얼마나 환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외부적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늦추지 않고 있다. '강패신문은 따로있는데 왜 우리가'라는 중앙기자들의 항변을 전하면서 "신문개혁에 접근하는 데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본금 100억원이 넘는 법인은 5년마다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도 "언론사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특혜"라며 "특혜를 없애고 원칙을 지키라는 제안이 비현실적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 이라며 일침을 놓고 있다. 그리고 "언론길들이기 의혹이 단 한점도 없다면" "강패신문앞에 몸사리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정간행물법 개정안에 눈 돌릴 것을 다시한번 주문한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국민의 정부'됨"임을 정확히 밝히고 있다.

이제 언론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이 드러났다. 기자들이 당당히 직업을 밝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되려면 정간행물법 개정을 통한 구조적 해결과 비리 언론인에 대한 자정노력동이 잇따라야 할 것이고 그것은 정부와 시민들의 압력을 통해서 가능한 일일 것이다.

11월 최고 사설, 최악 사설  
일간지 사설 및 내부필자 칼럼  
최고사설 - 선정작 없음.

최악사설 - 조선일보(김대중 칼럼) <간첩이 샅대질 하는 '공안'> [11/26일]  
추천칼럼 - 한겨레(홍세화의 빨간신호등) <나를 고소하라!> [11/29일]



최악사설 - [간첩이 샅대질하는 '공안'] (조선일보 11/26일자 김대중 칼럼) '공안 부활' 주장하는 김대중 논설위원, 신권에는 관심도 없나

이 칼럼은 서경원 전 의원 방북사건 재수사를 소재로 한 것이다. 많은 신문들이 이 사건의 재수사를 두고 정치적 해석에 연연하느라 본질을 왜곡했지만(11/27, 민언련 신문모니터 보고서, '정치적 해석으로 본질 흐려진 반인도적 범죄' 참조) 이번 수사는 누가 뭐래도 '법과 인권의 부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이번 수사를 통해 반인도적 범죄인 고문·조작 수사의 과오를 선명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주필은 이 칼럼에서 '법과 인권의 부활'이 아닌 '공안 기능의 부활'을 강조, 빈약한 인권의 식과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민언련 신문모니터분과는 이 칼럼을 '이 달의 최악 사설'로 선정하였다.

이 칼럼은 서경원 전 의원 방북사건 재수사가 고문·조작 수사의 의혹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아랑곳 없이 "검·경의 공안기능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공안기능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조선일보로서는 당연한 입장이 수 있겠지만 다수 독자들이 보기에는 서경원 의원 재수사의 본질을 상당히 왜곡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김주필은 "과거 우리의 공안기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긍정하고 있다"며 "오늘날 과거 공안 담당자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자업자득일 수도 있다"고 했다. 공안기능의 과오를 시인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인'은 조선일보의 논지전개를 위한 하나의 장식에 불과하다는 지적. "그렇다고 해서 추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 우리에게 지금 육식을 구분하는 지혜가 아쉽다"는 '다리'를 놓은 이후 이 칼럼은 시종일관 공안기능의 약화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을 뿐 정작 김 논설위원도 육식을 구분하지는

않았다.

특히 "과거의 공안수사관들이 재수사란 명목으로 후배검찰에 불러 다닌다면, 어제와 똑같은 공안경찰이 이제 와서 죄인시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누가 공안을 맡을 것인가."라는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칼럼 서두에서 "고문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적도 있었음"을 인정한 마당에 과거 공안검사들이 '후배 검찰에 불러 다니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법의 정신'보다는 서열을 따지는 '권위주의'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수많은 전직 관료들이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대상이 된 바 있고 최근에만 해도 전직 검찰청장이었던 김대정씨가 같은 과정을 밟고 있다. 게다가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수사한 경험을 안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조선일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검찰청장, 대통령도 구속하는 우리 사회에서 공안 수사관들이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가 예외가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몇몇 검사들이나 공안 경찰들이 수사대상에 오른다고 해서 검찰조직내부의 붕괴까지 말하는 것도 명백한 논리비약이다.

이 칼럼에는 '반인도적 범죄사건에 대한 재수사'라는 본질은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본질을 비껴간 주장을 계속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마구 혼란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공안은 속된 말로 돈 생기는 곳이 아니다. 간첩이 돈 줄리 없고 비뚤어진 공안기능의 경우도 정치사범이 뇌물 줄 턱이 없다", "진짜 공안은 외롭고 춥고 어두운 곳일 수밖에 없다" 등이 그렇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 함인가? 재수사를 벌이는 지금의 상황을 가치

관의 전도라고까지 지적하며 시작한 내용이 이제는 공안기관과 그들의 비인도적 처신에 대한 변호로 이어진 것이다.

칼럼 후반부 "김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것으로 그런 혐의에 대한 일체의 의혹에서 '사면'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정치적 해석이 아

니냐는 분석이다. 물론 이번 재수사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었다는 점은 충분히 짐작 가는 바이지만 이번 재수사를 대통령 개인의 '명예회복'이라든가 '사면', '한풀이'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를 부각하는 것은 무슨 사안이든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진실규명에 소홀히 하는 보도습성을 반복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정치적 해석에서 당시 사건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거의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와 김주필이 서경원 의원을 간첩이라고 단정한 것도 바로 수사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무시된 것이었다. 고문·강압수사 의혹으로 재수사까지 벌이는 사건에 대해 이전 수사결과를 기정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진실규명에 관심이 없음을 반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제있다고 전체 욕할수야

지금 우리 사회에서 김·경(金·鄭)의 공안(公安)기능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과거 간첩사건을 맡아 수사했던 검사들이 재조사를 이유로 검찰에 불려가고 있고 전직 공안경찰들 역시 조사의 도마 위에 올라갔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단죄했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들은 고문도서 풀려나와 어떤 자는 우리의 공안기능에 샅대질을 해대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상형의 줄거리만 보면 주재(主裁)가 보따리를 바래 온 것 같다. 우리는 지금 가치관의 전도(顛倒)를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우리의 공안기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긍정하고 있다. 공안의 명분 아래 정권적 이해(利害)나 권력적 허영을 추구한 측면도 있고, 또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공안에 대한 인식을 추락시킨 경우도 있다.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공안사범으로 몰아 고문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적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과

사면 명목으로 후배검찰에 불러다닌다면, 어제와 똑같은 공안경찰이 이제 와서 죄인시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누가 공안을 맡을 것인가. 공안이 천막꾸러기가 됐을 때 우리 사회의 안녕과 국가의 체면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공안업무는 얼핏 '폭력'의 인상을 동반하고 있지만 그 나름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공안은 속된 말로 '돈 생기는 곳'이 아

아닐 수 없다. 김 대통령은 대통령이 당선된 것으로 그런 혐의에 대한 일체의 의혹에서 '사면'된 것으로 봐야 한다. 아무리 야망의원이 공개석상에서 그 문제를 꺼내다 하더라도 "그때 따져보지"는 식으로 나설 일이 아니었다. 결국 사태는 간첩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서경원씨가 자신을 '통일자랑'가로, 복역 받은 공작들을 '통일자랑'으로 보란듯이 찬양하고 나서고, 유수한 공안검사들이 검찰에 불러가는, 검찰조직의 내부적 붕괴로까지 발전하고 말았다.

'간첩'이 샅대질하는 '공안'

반체제 사범은 嚴罰 마땅

거 공안 담당자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자업자득(自業自得)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추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 우리에게 지금 육식을 구분하는 지혜가 아쉽다. 공안은 공공(公公)의 안녕과 체제(시스템)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다. 공안의 일차적 목적은 그 사회의 확립된 기층가치를 재확인하거나 전복하는 행위, 즉 반(反)체제적 요소들을 다스리는 데 있다. 따라서 과거 일부 공안기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공안기능 전체를 매도하거나 가치전도의 심룡이 벌어지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다. 과거의 공안수사관들이 재수

사면, 간첩이 돈 줄리 없고 비뚤어진 공안기능의 경우도 정치사범이 뇌물 줄 턱이 없다. 또 '진짜 간첩' 사건의 경우 간첩들의 자에게 "누구와 결연했느냐"고 물었느냐에 순순히 대답할 간첩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생략해 두어야 한다. '진짜 공안'은 외롭고 춥고 어두운 곳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 청와대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이른바 '1인방' 재수사자로 재수사하자고 나선 것은, 그것 자체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불러온 '공안기능의 약화'라는 사태에 대한 심찰을 소홀히 한 자체가

정부·여당이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말하러 정정명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그러나 다짐할 일이지는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恨)이 용공조작과 지역장악이라고 실로한 김 대통령은 그 한의 한지락을 풀려다가 거꾸로 김 대통령을 일관한 이후 이 사회에 용공성 분위기가 절망하고 있다는 보수적 시각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 행적이 되고 말았다.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공안의 기능을 간첩 등 반체제사범을 엄격히 다스리는 쪽으로 바로잡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주필



이 칼럼 초반의 '위기의식'은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 노골화되었다. 김주필은 "자신의 한이 용공조작과 지역감정이라고 실토한 김 대통령은 그 한의 한 자락을 풀려다가 거꾸로 김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이 사회에 용공성 분위기가 점증하고 있다는 보수적 시각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며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공안의 기능을 간첩 등 반체제사범을 엄하게 다스리는 쪽으로 바로잡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용공조작과 지역감정은 굳이 김대중 대통령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요소라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요소를 적극 악용해온 조선일보가 '보수적 시각'임을 빌어 김대통령 집권 이후 용공성 분위기가 점증한다고 한 것은 과거 김대중씨에 대해 매카시적 색깔공세를 퍼던 것과 달라진 바 없는 태도다. 뿐만 아니라 과거 잘못된 수사관행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단죄를 얘기하는 현 시점에서 그 핵심 책임자인 공안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은 이념적 편향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절실히 느끼게 해주었다는 분석이다.



추천칼럼 - <나를 고소하라!> (한겨레 11월 29일자 - 홍세화의 빨간신호등-) 행동하는 지식인의 용기 일깨워

이 칼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지난 해 발생한 '최장집 교수논문'에 대한 조선일보의 사상검증 사태에 대한 일별이 필요하다.

지난 해 조선일보는 당시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최장집 교수의 논문을 문제삼음으로써 최 교수의 사상을 검증하려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사상 검증은 최장집교수 논문중 일부분을 왜곡 인용하여 논문전체의 흐름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비판 받은 바 있다. 조선일보의 사상검증은 곧 시민단체와 다른 언론들에 의하여 강하게 비판받기 시작했다. 또 진보와 보수진영간의 사상논쟁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에 앞장 섰던 <월간 말>, <월간 인물과 사상>은 법의 심판대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최장집 교수가 조선일보에 특별기고문을 실음으로써 '봉합수준'으로 양측은 '화해'했고 이후 최장집 교수는 대통령자문정책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진행되던 이들 싸움은 법원이 지난 11월 19일 법원은 <월간 말>, <인물과 사상>, 전북대 강준만 교수, 월간 말 정지환 기자에게 벌금형을 선고 함으로써 조선일보의 '승리'로 일단락 되었다.

이 달의 추천칼럼 <나를 고소하라!>는 프랑스의 유사사건인 '장 마리 르펜의 소송'과 조선일보 소송판결 이후 양국의 사회분위기를 비교하며 한국사회의 극우세력과 조선일보의 문제 더 나아가 이들에 대한 지식인들의 태도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홍씨는 '스승의 등에 칼을 꽂은 청부살인업자', '마조히즘적인 정신분열증상'이라는 강준만 교수와 <월간 말> 정지환 기자의 표현을 '살인자 집단의 수괴', '인간 역사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망령', '피로 살찌는 흙혈귀'등 프랑스에서 문제되었던 구문과 비교, "한국에서 문제된 말들은 프랑스에선 소송대상이 되기 어려웠

을 것"이라며 양국의 차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경우 법원판결에 대한 프랑스 문인들의 적극적 행동, 즉 '똑같이 쓸 준비가 돼 있다', '그대로 썼으니', '나를 고소하라!' 라는 일련의 행동들은 한국의 상황과 판이한 것이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대부분의 한국언론은 이 판결결과에 대해 법적인 승패만을 보도하였을 뿐이다. 명예훼손 소송의 남발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법적 판결이 마치 그 사건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처럼 인식되는 풍조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하는 언론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칼럼은 사건의 본질파악을 넘어 해법까지 제시했다는 평가다. 100여년전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에 이어 이번 '장 마리 르펜의 소송'에 대한 프랑스 지식인들의 행동을 통해 '법 맹신주의의 위험성'과 진정한 명예회복의 의미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사실 최근 들어 명예훼손 소송이 남발하는 경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이다.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정의'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이 반드시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그다지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최근 고문과 강압 수사 의혹을 사고 재수사되고 있는 서경원 전 의원 방북사건도 법원 판결의 오류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칼럼은 명예훼손 소송과 법의 오용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지식인의 용기있는 행동의 필요성을 일깨워주었다는 평가다.

칼럼 마지막, "<조선일보> 기자가 최장집 교수를 빨갱이로 몰기 위해 '스승의 등에 칼을 꽂은 청부살인업자'가 되어 '마조히즘적인 정신분열증상'을 보이며 사상 검증을 했던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 나를 고소하라! 서명 홍세화-"라는 부분은 한 망명 지식인의 언행일치를 보여준 호뜻한 대목이다.

최근 한국과 프랑스에 비슷한 재판이 있었다. 둘 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사건이었다. 프랑스의 소송에선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의 우두머리인 장 마리 르펜이 이치고 한국에선 <조선일보> 기자가 이었다. 이른바 '명예'가 문제되어 제스된 두 재판(한국판과 프랑스판)을 비교해보자.

한국판에선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던 최장집 교수의 사상을 검증한 <조선일보> 이한우 기자를 가리켜 '스승의 등에 칼을 꽂은 청부살인업자'라고 쓴 강준만 교수가 월간 <인물과 사상>과 함께 700만원의 벌금형을, '마조히즘적인 정신분열증상'이라고 쓴 정지환 기자가 월간 <말>과 함께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프랑스와 한국의 두 재판

프랑스판에선 <리베라시옹>의 기자가 쓴 소설이 문제됐다. 프랑스판에선 기자가 피고였는데 한국판에선 기자가 피고도 됐지만 원고도 됐다. 프랑스의 기자는 비판하고 토론하지 소송 같은 일은 벌이지 않는 데 비해, 한국의 <조선일보> 기자는 소송을 택한 차이에 온 것이겠다. 혹은 극우세력은 여기서나 소송을 즐기는 것일 수도 있겠다.

<리베라시옹>의 마리의 행동 기자가 쓴 소설의 제목은 '장 마리 르펜의 소송'이다.

고향을 신고받게 된다. 그때 최후진술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프랑스는 명예를 구하는데 도와준 나에게 감사할 것이다."

그도 명예를 말했다. 자신의 명예가 아닌 '프랑스의 명예'를. 그리고 그의 말대로 프랑스의 명예는 구해졌다.

프랑스의 문인들이 즉각 들고 일어났다는 점이다. 일차 서명자만 100명에 이르는 문인들은 문제된 네개의 구문을 <리베라시옹>에 그대로 옮겨 쓰면서 '똑같이 쓸 준비가 돼 있다'는 후렴을 붙였다. 그리고는 '그대로 썼으니', '나를 고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논리가 서지 않나면서, "나를 고소하라!"

이 말은 100여년 전의 에밀 졸라를 상기시킨다. 그는 유명한 '나는 고발한다!'에서 억울한 드레퓌스 대위에게 반역죄를 들춰낸 책임자들의 죄상을 조목조목 고발한 뒤에 '내가 그대들을 무고했다면 나를 고소하라!'고 외쳤다. 실제로 그는 고소당해 피고석에 섰고 3천프랑의 벌금형과 1년 감

"똑같이 쓸 준비돼 있다"

<조선일보> 기자와 장 마리 르펜은 이번 재판 결과로 훼손했다는 명예를 보상받았을까? 나는 알 수 없다. 심은 그들의 명예에 나는 관심조차 없다. 또 장 마리 르펜이 우두머리로 있는 프랑스의 극우세력에게도 나는 큰 관심이 없다. 나의 주된 관심은 감히 말하건대 '한국의 명예'에 있고, 따라서 '한국의 명예'라는 말조차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 한국의 극우세력과 그 대표적인 <조선일보>의 극복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조선일보> 기자가 최장집 교수를 빨갱이로 몰기 위해 '스승의 등에 칼을 꽂은 청부살인업자'가 되어 '마조히즘적인 정신분열증상'을 보이며 사상 검증을 했던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나를 고소하라! 서명 홍세화."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지은이

12월 최고 사실, 최악 사실  
일간지 사실 및 내부필자 칼럼

최고 - 경향신문 <빈곤층 실태라도 조사하라> 12월 10일

추천 - 한겨레 <'반체제' 죄와벌> 12월 2일

최악 - 중앙일보 <폭언·폭력이 난무하는 사회> 12월 15일

최악 - 조선일보 <정말 '싸가지 없는' 세상> 12월 15일

최악 - 세계일보 <폭력시위 추방을> 12월 13일



최고 사실 - 경향신문 12월 10일자 <빈곤층 실태라도 조사하라>

간과하기 쉬운 빈곤층 실태 환기, 정확한 통계 조사 촉구

민언련 신문 모니터분과는 12월 10일자 경향신문 사실인 <빈곤층 실태라도 조사하라>를 이 달(12월)의 최고 사실로 선정하였다. 이 사실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되고 있는 빈곤층 문제를 세밀히 다루었으며 정부가 술선수범 하여 빈곤층의 실태를 조사하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IMF 사태 이후 급격히 늘어난 빈곤층이 서서히 고정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실물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치적인 경기 지수는 높아졌고 정부나 언론은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별것 아니다'란 식으로 경기에 대한 낙관론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의 체감이나 소비 시장의 현실과 민간 전문가들의 진단과 엇갈리고 있다.

사실이라는 것이 막연한 당위론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시의 적절하고 구체적인 현실을 꼬집어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한다면 빈곤층에 대한 실제적 진단과 정부의 낙관론에 일침을 가하는 이 사실은 사실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사실은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으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 부분부터 이 사실은 빈곤의 정확한 본질부터 세심히 짚었다. "빈곤은 시장 원리로 해결될 수 없는 문

제다" 라는 첫 문장과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에 상존하는 빈곤문제의 예 등 모두 신자유주의를 토대로 경기 문제를 타개하려는 현 정부의 시책에 대한 간결한 정문일침이다. 이어 정부가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 현상에 대하여 취하는 낙관론에 대해 직접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은 다른 중앙 일간지들이 경기 문제에 대하여 공허한 원칙론을 취하면서 해결 방향을 막연히 제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가 내린 낙관적 진단이 현실과 동떨어진 허구적 통계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는 분명히 오판이다. 정부가 펴는 낙관론의 근거가 지니계수(소득불평등계수)와 중산층 소득점유율의 개선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 근거는 탁상에서의 통계늘음적 성격이 짙다고 이 사실은 비판했다. 또 지니계수라는 것이 소득분배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물로 이미 3공때부터 제시돼온 고전적 지표임을 지적, 설득력을 더해주었다. 따라서 단지 경기 변동에 의한 통계치의 변화가 구조적 또는 장기적 추세라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들은 대체로 타당하다. 타당한 이유는 대표적으로 실업의 예에서 증명된다. 정부는 '4%로 떨어진 실업률과 1백만명 선으로 줄어든 실업자 수'를 바탕으로 실업문제의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취업자 중 정규직이 47%에 불과하며 취업자의 98%가 임시/일용직이라는 질적인 근거 앞에서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정부는 비정규직의 증가를 공공근로 등 단기대책의 주요한 결과라고 둘러대지만, 이런 핑계는 앞에서 주장한 "4%대의 실업률"이 거품 가득한 허수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사실은 지적했다. 첫부분의 문제제기도 좋았지만 정부의 허구적인 숫자 사기를 논리 정연하게 드러낸 것은 사실의 예리함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상황하거나 당위에 그친 결론을 대신하여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 점이 이 사실의 백미다.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빈민 숫자를 내놓지 못하는 정부의 실태부터 따지면서 우선 정밀한 빈곤층 실태조사부터 착수하라는 끝부분의 주장은 다른 사실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실천 가능한 대안이다.

요컨대 보통 잘 다루지 않아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빈곤층 실태"란 소재 선정, '정부의 낙관론'을 직접적으로 꼬집는 문제 제기, 양적인 숫자로 여론을 호도 하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탄탄한 논거, 그리고 마무리 부분에서 대안으로 내세운 '정밀한 빈곤층 실태 조사의 실시' 등은 각각 손색이 없다. 무엇보다

빈곤층 실태라도 조사하라

빈곤은 시장원리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에 빈곤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다.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벗고 나서도 쉽게 치유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가 바로 가난의 퇴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별것 아니다'라는 식으로 둘러서기 시작하면 문제해결은 물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정부가 IMF사태 이후 심화된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 현상을 놓고 고만을 치기에는커녕 낙관론으로 들변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걱정스런 일이다.

정부는 몇고져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소득분배 문제에 대해 몇가지 주목되는 진언을 내렸다. 최근의 분배구조 악화는 IMF 쇼크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며, 물 들어서는 경기회복과 함께 오히려 소득격차가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산층이 붕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빈민을 저기하면서 중산층의 소득비중은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체감(體感)이나 시장의 현실, 민간전문가들의 진단

을 바탕으로 한 빈곤층 실태 조사는 빈곤층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층의 수를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빈곤층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빈곤을 퇴치하는 데 필수적이다. 빈곤층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빈곤을 퇴치하는 데 필수적이다. 빈곤층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빈곤을 퇴치하는 데 필수적이다.

빈곤은 시장원리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에 빈곤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다.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벗고 나서도 쉽게 치유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가 바로 가난의 퇴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별것 아니다'라는 식으로 둘러서기 시작하면 문제해결은 물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정부가 IMF사태 이후 심화된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 현상을 놓고 고만을 치기에는커녕 낙관론으로 들변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걱정스런 일이다.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니계수는 3공때부터 소득분배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물로 제시돼온 고전적 지표다. 경기변동에 따른 통계치의 변화를 곧바로 구조적 또는 장기적 추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실업문제가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실업률이 4%대로 떨어지고, 실업자 수가 1백만명 선으로 줄었다고 내세운다. 그러나 취업자의 질은 어딘가, 전체 취업자중 정규직은 47%에 불과하다. 올해 취업자의 98%는 임시·일용직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공공근로 등 단기대책이 주요한 결과라고 둘러댄다. 그렇다면 4%대의 실업률은 거품 가득한 허수(虛數)라는 얘기가 아닌가.

정부는 탁상에서의 통계늘음이 더이상 연연해서는 안된다. 지난달 참여연대가 '빈민이 1천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을 때 정부는 골똘똘똘였다. 그러면서도 정확한 빈민 숫자를 내놓지 못했다.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정부가 빈민구조의 개선을 말한다고 해서 누가 믿는가. 빈민구조의 개선을 말한다고 해서 누가 믿는가. 빈민구조의 개선을 말한다고 해서 누가 믿는가.

정부가 낙관론을 펴는 근거는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몇가지 통계지표다. 지니계수(소득 불평등계수)와 중산층 소득점유율이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니계수는 3공때부터 소득분배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물로 제시돼온 고전적 지표다. 경기변동에 따른 통계치의 변화를 곧바로 구조적 또는 장기적 추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